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2015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Informing the Public on Policy Issues and Promoting Economic Literacy

| | |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 연구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연구진 | 김주훈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책임연구원) 심재학 KDI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실장(공동연구원) 김진영 KDI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공동연구원) 공은주 KDI경제정보센터 학교경제1팀 팀장(연구원) 임효상 KDI경제정보센터 학교경제1팀 전문연구원(연구원) 김민정 KDI지식협력단지추진단 지식협력팀 연구원(연구원) |
| 자문위원 |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
| 연구관리 | KDI국제정책대학원 |
| 사업총괄기관 | 기획재정부 |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679-01

ISBN 979-11-5545-167-0 94320

ISBN 979-11-5545-164-9 (전6권)

Copyright © 기획재정부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Preface 서문

식민 지배와 내전의 참화를 연이어 겪었음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이룬 한국의 사례는 저개발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벤치마킹의 모델로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지식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굳건히 구축하기 위한 지식공유 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은 2015년까지 총 55개 협력대상국에 860여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 정책자문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이 기여한 정책사례를 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8대 분야로 나누어 정책사례별로 발굴·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경험을 총체적 지식창고 형태로 정리한 동 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 협력대상국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모듈화사업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6개 세부과제 및 2개의 e-콘텐츠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용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온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모듈화사업의 성과인 6개 보고서는 경제교육을 통한 정부와 국민 간 사회적 소통 강화 노력,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도입 및 금융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식별시스템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지속가능성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제 개방 경험 및 재정안정화 정책 등 기존의 정책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e-콘텐츠의 경우 경제고도성장기 정책집행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수출진흥확대회의 운영,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사례로써 한국의 게임산업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공유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016년 1월 런칭하는 세계은행의 Open Learning Campus(OLC)에 지금까지 구축된 모듈화사업 14개 e-콘텐츠 탑재를 확정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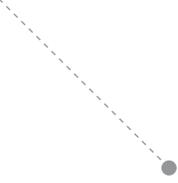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 특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듈화사업에 기여해 주신 모든 기관과 참여 전문가들의 노력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국과 한국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풍요로운 지구촌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태중 실장과 서민영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5년 12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김준경



Contents

| | |
|-------------------------------------|----|
| 요약 | 10 |
| 제1장 서론 | 13 |
| 제2장 경제교육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 17 |
| 제1절 경제교육 추진의 시대적 배경 | 18 |
| 제2절 경제교육의 추진 계기 | 21 |
| 제3장 경제교육 추진 전략 및 체계 | 23 |
| 제1절 경제교육 추진 전략 | 24 |
| 제2절 경제교육 추진 체계 | 28 |
| 제4장 1980~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 35 |
| 제1절 198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 36 |
| 제2절 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 40 |
| 제5장 경제교육 추진방향과 세부내용 | 43 |
| 제1절 경제교육 추진방향 | 44 |
| 제2절 경제교육 수단 및 내용 | 47 |
| 제3절 주요 경제교육 사례 | 53 |
| 제4절 1990년대 이후 경제교육 | 66 |

| | |
|---------------------------------|----|
| 제6장 경제교육에 대한 평가 | 71 |
| 제1절 경제교육의 정책효과 평가 | 72 |
| 제2절 경제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평가 | 74 |
| 제3절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 평가 | 76 |
| 제4절 언론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 경제교육 | 77 |
| 제5절 정책 보완점 | 83 |
| | |
| 제7장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 85 |
| 제1절 개도국에 대한 전파 가능성 | 86 |
| 제2절 개도국에 대한 정책 제언 | 87 |
| | |
| 참고문헌 | 90 |
| | |
| 부록 | 93 |

Contents | 표 목차

제3장

- 〈표 3-1〉 경제교육·홍보의 과제(경제교육종합계획)..... 27
- 〈표 3-2〉 정부 및 민간의 주요 경제교육 주관기관 변화..... 32

제5장

- 〈표 5-1〉 주요 경제교육 슬라이드(1979~1982) 48
- 〈표 5-2〉 대상별 경제교육 교재 예시(1982~1983) 49
- 〈표 5-3〉 경제기획원 주도의 주요 매체 49
- 〈표 5-4〉 경제정책 홍보방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 조사 결과 52
- 〈표 5-5〉 경제 관련 홍보물 접촉 경험 52
- 〈표 5-6〉 1983년 제작되어 사용된 공무원 교육자료 57

제6장

- 〈표 6-1〉 경제교육 관련 키워드 신문 출현 빈도 78

Contents |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한국의 소비자물가 등락률(1965~1979) 19

제3장

[그림 3-1] 1981년 추곡수매가 인상 관련 기사 25
[그림 3-2] 정부의 경제교육 실시체계도 30

제5장

[그림 5-1] 공무원 경제교육 교재(1981년) 54
[그림 5-2] 1983년도 하계 공직자 경제교육 모습 56
[그림 5-3] 1983년 드라마 「객주」 관련 기사 63
[그림 5-4] 생선 반마리만 주세요. 64
[그림 5-5] 나라경제 잡지 표지 65

제6장

[그림 6-1] 소비자물가 등락률(1960~1999) 73
[그림 6-2] “경제교육” 키워드 검색 결과 80
[그림 6-3] 경제교육(좌) 및 물가상승(우) 검색 결과 81
[그림 6-4] 경제교육(좌) 및 임금인상(우) 검색 결과 82
[그림 6-5] 경제교육(좌) 및 추곡수매가(우) 검색 결과 82

요약

한국은 기적으로 일컬어질 만큼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부존 자원과 같은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발전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했다고 해서 경제발전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정책들이 추진과정에서 실패 혹은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과정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나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대응 노력을 한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가 바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국민 경제교육이다. 당시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경제교육은 하나의 정책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1980~1990년대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당시 한국정부가 추진한 경제교육의 목표, 추진 배경과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체계, 세부내용, 평가,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한국에서 약 20여 년간 추진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성장에 역점을 둔 것들이었다. 이러한 성장 우선의 발전전략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국내 투자는 1976년 15%, 1977년 27%, 1978년 41%나 되었다.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생활보전 차원의 임금인상이 일어나고, 가파른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곡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수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곡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경제 고속성장의 이면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오일쇼크는 유류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삶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1979년에 일어난 오일쇼크 등과 맞물리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성장우선의 발전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물론 기업인이나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까지 성장우선 정책을 당연시 하던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등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정부가 생각해 낸 정책아이디어가 바로 대국민 경제교육이었다. 경제교육의 주요 목적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물론 세계경제 상황까지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기존의 성장우선 정책을 안정우선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경제기획원이 1979년 4월에 발표한 경제안정화시책은 성장우선 발전전략을 ‘안정·자율·개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등 어느 하나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경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경제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한국 정부는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경제교육 전담 고위 공무원을 배치했다.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관련 교재를 만들고 직접 대국민 경제교육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방송 등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 슬라이드 및 만화 등의 경제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른 다양한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난이도를 달리하는 맞춤형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러한 경제교육 교재들을 가지고 정책당국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광범위한 교육대상자들을 교육시켰다.

한국의 대국민 경제교육은 근로자·공무원·군인·공공기관 종사자 등 수백만 명을 직접 교육했다. 또한 강사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교육 외에 TV 방송을 활용한 대국민 경제교육에도 매진했다. 방송의 경우,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주요 선진국들이 처한 상황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해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대국민 경제교육 효과는 1차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였고, 2차적으로는 정책효과로 이어져 연 10~25%대에 달하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10% 이내로 급격히 안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동결과 추곡수매가 동결, 예산 동결 등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강력한 경제안정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국민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경제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변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학교 경제교육을 기존 이론중심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과서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교육 보조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공급하여 활용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에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대국민 경제교육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80~199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제교육의 경험은, 국민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관련 정책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차원을 넘어 시장경제원리는 물론 국내외 경제 환경을 대상별로 쉽고 재미있게 맞춤형으로 교육한 것도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국가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변화 및 발전시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개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1장

서론

서론

1960~70년대의 한국경제는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1980년대에는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198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정책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대국민 경제교육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중요한 정책변화를 꾀할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책변화를 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진행된 경제교육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대국민 경제교육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지, 경제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경제교육의 내용과 자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경제교육 대상은 주로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 및 범위는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교육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 본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정부 문서 및 실제 사용된 경제교육 교재,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한 문헌 조사와 당시 대국민 경제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던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증언 조사 위주로 진행한다.

대국민 경제교육의 계획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정부문서를 통해서 당시 경제교육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되었던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주요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얻으며 이를 통해 정책분석에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대국민 경제교육의 추진체계 및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보도의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당시 경제교육이 국민 혹은 언론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국민 경제교육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즉, 현재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1980년대 한국이 처한 상황과는 소득수준, 인터넷 등 통신기기 발달, 민주화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육 방법론 혹은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을 참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들이 중요한 정책전환을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특히 시대상황이 변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경제교육을 수행해야 할지 등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2장

경제교육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1절 경제교육 추진의 시대적 배경

제2절 경제교육의 추진 계기

경제교육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1절 경제교육 추진의 시대적 배경

오늘날 한국은 연간 교역량이 1조 달러를 넘는 무역대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이러한 성과는 불과 60여년 만에 이루어낸 것으로,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세계가 한국 경제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존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에 이룬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60년 전의 한국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한국은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미군정을 거치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국토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전쟁 직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근근이 생활하다시피 했다. 정부의 재정도 상당 부분 미국의 원조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나라의 재정은 말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할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화되어 갔다.

이러한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다. 즉, 1961년 5월에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1961년 7월에 경제기획원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된다. 경제기획원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외자 도입을 주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당시 정책들은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한국은 1961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20여 년간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다. 1966~1970년의 경우에는 59개 개도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1위, 수출신장률 1위, 고용증가율 2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경제기획원이 출범한 1961년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1990년까지의 한국경제발전 내용을 보면 GNP는 21억 달러에서 2,379억 달러로 113배 증가하였고, 국민 1인 당 GNP는 82달러에서 5,569달러로 68배나 급증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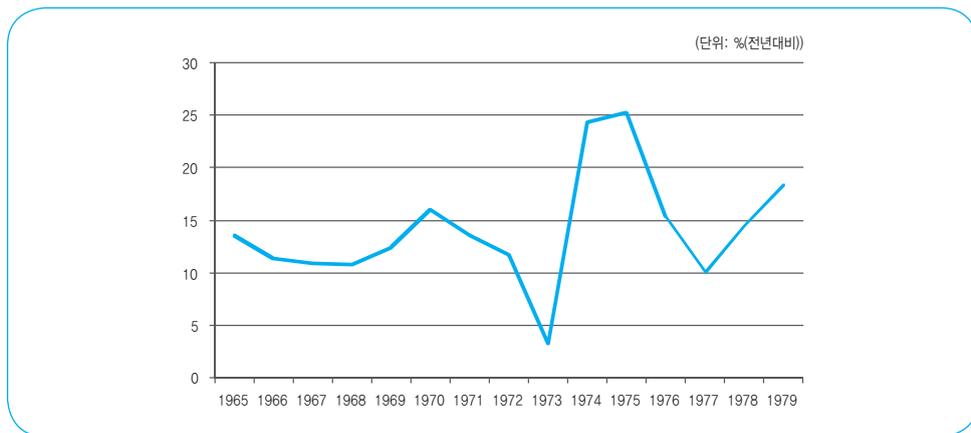
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아 미래클』, 나남, 2013.

2015년 현재 1인 당 GDP는 약 30,000달러에 가깝고, 수출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규모는 2011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속성장 사례라고 하겠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한 것은 가난한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포함해 헌신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있었고, 이를 이해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구가하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의 만성화와 재정건전성의 훼손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본집약적인 섬유, 합판, 가발 등 경공업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즉, 당시까지는 비교우위에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였던 반면에, 1973년 이후로는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비교우위를 거스르는 전략을 채택한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경제에 무리를 주었고 과도한 물가상승을 초래했다.²⁾ 1980년대를 맞이하기 직전에는 오일쇼크까지 가세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정책을 지향해오던 한국경제는 경기를 안정화 시키고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민간주도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바탕한 자율화를 수반해야 한다. 시장기능 활성화는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기업과 농민들을 경쟁의 장에 노출시키는 것이 된다.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닫아놓았던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정책금융 등 정부의 간섭으로 자율성이 낮았던 국내 금융시장도 시장기능에 맡겨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추곡수매가의 인상률을 동결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높은 인력수요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강력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2-1 | 한국의 소비자물가 등락률(1965~1979)



출처: 통계청.

2) Justin Yifu Lin,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 Cambridge, 2009, pp.83~84.

한국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물론 관료나 기업인들도 고속성장을 당연 시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에 변화를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기획원과 KDI 등 일각에서 한국경제를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정책으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KDI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었던 前재부부장관인 사공일 박사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60년대~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해방 이후 구조적인 문제였고, 경제 개발 과정에서 자본축적 없이 고도성장을 하려니 높은 투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 또한 1970년대 초반에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예측한 세계경제와 실제 세계경제 상황이 맞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주도의 육성으로 과잉투자, 중복투자 등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1979년에는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1970년대 말에 KDI가 조심스레 안정화정책을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의 정부 분위기와 정책들은 아직 성장 중심이었다. 사실 박 대통령 서거 직전에 분위기가 바뀌는 중이었다. 그 동기 중 하나가 사회경제원, KDI에서 안정화정책에 대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 엄청난 냉해가 들었다. 당시 쌀 생산이 매우 중요했는데 흉년이 들어 문제가 되었다. GNP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평년작이 3,500만석 정도인데 2,800만석으로 확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기름 값이 2~3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서거했다. 경제성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7%)이 되었다.

1980년에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오일쇼크로 인해 국제수지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두 자리 이상으로 치솟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긴축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긴축정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했고, 경제 기반을 다진 후에 지속 성장을 해야 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안정 성장 구축을 내걸었다. 정부의 우려는 정부와 국민 서로가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추곡수매가를 올린다면 물가 및 임금 등이 곧 상승할 테고, 이러한 고통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문제였다. 모든 경제 단위가 참여하고 협조해야 했다.”

한국경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게 되자, 1979년 4월 경제기획원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목적으로 입안해 발표한 정책이 바로 경제안정화시책이다. 그런데 경제안정화시책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기는 것이어서 곧바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도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신념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

일부 공직자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정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부 공적인 회의에서 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했지만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성장론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변화 필요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통해 한국경제 스스로를 압박해 오고 있었다.

제2절 경제교육의 추진 계기

지난 20여 년간 고속성장을 구가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은 1979년에 들어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유류가격 폭등과 높은 추곡수매가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20% 가까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재정건전성이 점점 훼손되고 있었다. 그해 10월에는 한국경제의 기적을 만드는데 중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말 그대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1980년에 들어와서는 노사분규가 심해지고,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오일쇼크 여파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30% 가까이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특히, 유례가 없는 냉해로 인해 벼농사가 흉작이 됨으로써 농민들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점점 가중되었다. 한국경제가 패닉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물론 인플레이션 등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만성화된 문제였지만 1979년과 1980년의 한국 경제상황은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문하는 반증이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즉 경제안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79년 4월에 경제기획원이 자율화·개방화·민영화를 골자로 하여 발표한 정책이 바로 ‘경제안정화시책’이다. 그런데 경제안정화시책은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고, 각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곧바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경제기획원은 관련 홍보자료를 만들어 대국민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 10월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였다.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이 군인 출신인 대통령의 경제부문에 대한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경제일반은 물론 한국경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안정화시책 추진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1년 1월에 대통령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고관은 물론 근로자·군인 등 모든 국민들이 경제를 모르면 대외경쟁에서 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경제교육을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반복해서 추진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도 경제 사정 특히 한국경제가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대국민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처럼 경제교육은 1979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대통령이 경제교육에 관심을 높이기 시작한 1980년 중반부터였다.

한국경제의 안정화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은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Back Ground)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인류가 성장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당시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 정책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증언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대국민 경제교육의 시작 계기는,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수준의 정책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국민 경제교육이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양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낸 것은 주요 정책당국자는 물론 대통령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3장

경제교육 추진 전략 및 체계

제1절 경제교육 추진 전략

제2절 경제교육 추진 체계

경제교육 추진 전략 및 체계

제1절 경제교육 추진 전략

1. 홍보에서 교육으로의 전환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60~1970년대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홍보방식을 취했다. 그러한 홍보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해도 당시 한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에서의 고속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높은 한국의 교육열로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강하게 분출하기 시작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성장이 낳은 부작용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득보존 차원에서 임금과 추곡수매가에 대한 인상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점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거나 따르기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책추진 시 일방적인 홍보와 추진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전략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국민 경제교육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경제교육의 구체적 추진 사례의 하나인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들어 경제안정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곡수매가의 인상률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난관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재정적자가 GNP의 6%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적자의 최대 요인이 양곡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추곡수매가 억제가 안정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였다. 정부는 추곡수매가 안정을 위해 농민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대대적인 경제교육을 시행했다.

그림 3-1 | 1981년 추곡수매가 인상 관련 기사



정부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4% 인상하기로 발표했다는 기사. 정부의 추곡수매가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1979년 22%, 1980년 25%였으므로 인상률이 크게 줄었는데, 당시 고건 농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곡수매가는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나 농가생산비보다는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혀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1981.10.30.

2. 정부의 경제교육 기본 방침

1981년 정부가 작성한 경제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현실의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욕구의 수렴을 통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입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국가적 역량으로 집결하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³⁾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전환 차원에서 경제교육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을 경제교육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였다.

첫째, 경제교육은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되 대중매체의 광범한 활용,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운동으로 이끈다. 둘째, 경제교육은 경제기획원의 주도 하에 대상별로 각 부처가 실시한다. 셋째, 경제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넷째, 확실성을 지양하여 경제주체의 특성과 역할에 적응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며 정부당국과 각 분야 여론지도층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얻도록 한다. 다섯째, 각 부처 및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일관성·연계성을 유지한다.

3)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교육종합계획」, 1981.

이러한 정부의 경제교육 기본 방침에 나와 있듯이, 당시 경제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되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정부정책을 따라오라는 형태는 아니었다.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추진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화하여 대국민 경제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정책당국자들이 경제교육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3. 경제교육의 과제

경제교육종합계획(1981)에 따르면 정부는 대국민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경제주체별로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민적 과제'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이 '안정화 시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제시된 내용은 '고인플레이 기대심리의 단절'이다. 이에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짐으로써 우리도 일본·독일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와 같이 선진국의 물가안정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각오'이다. 기업·근로자·농민·가계·정부 등 주요 경제주체들에게 안정화시책과 같은 정책 수단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단결과 분발'이다.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온 국민의 노력과 국산품 애용 및 소비절약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원가절감, 에너지자원 절감', '품질향상', '기술혁신·기능향상' 등을 경제교육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농민'에 대해서는 물가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협조', '임금인상 자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외소득 증대' 등의 사항을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근로자와 농민임을 강조하였다. '가계'에 대해서는 새 시대의 생활방식으로 근검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정립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저축을 생활화 할 것을 경제교육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등의 솔선수범,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솔직하고 납득될 만한 설명 등 '국민의 신뢰' 확보와 '내일의 Vision 제시'를 경제교육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표 3-1 | 경제교육·홍보의 과제(경제교육종합계획)

| 경제주체 | 주요 과제 |
|--------|--|
| 국민적 과제 | 가. 고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스스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짐으로써 일본·독일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각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근로자, 농민, 가계, 정부 다.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단결과 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증대와 수입억제 • 온 국민의 똘치진 노력만으로 가능 • 국산품 애용과 소비절약 |
| 기업 |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70년대 의존적 관성 청산 가. 원가절감, 에너지 자원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 성공사례의 추적 분석보도 나. 품질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의 장인의식, QC효과 • QC의 대중운동화 다. 기술혁신·기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의 산업별 기술의 발전소개 • '기능인의 세계기술·기능인에의 조명 |
| 노동자·농민 | 물가안정·생산성향상 가. 노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노사협조-일본부강의 비결 • 근로자의 근로정신과 자세 나. 임금 인상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의 해악-피해자는 근로자·농민 다.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외소득 증대 |
| 가계 | 근검·절약·저축 가. 근검·절약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시대의 생활방식 정립 나. 저축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의 근검·절약·저축생활-우리 생활의 반성 |
| 정부 | 정책신뢰확보·홍보 가. 국민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선수범-예산절약·능률 • 정책의 일관성 • 솔직하고 납득될 만한 설명-국민의 이해와 공감 나. 내일의 Vision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내와 희망 |

출처: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교육종합계획」, 1981.

4. 경제교육 추진 방법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교육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⁴⁾ 우선, 대중매체의 활용이다. TV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보도 프로그램, 주부대상 프로그램, 교양특집, 드라마, 공공광고 등에 지속적으로 경제교육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문 기사나 특집, 칼럼, 좌담, 기고 등 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정부·국영기업체·경제단체·기업체·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강연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협의회, 간담회, 세미나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등을 활용한 계도활동 역시 계획하였다.

특히 당시 경제교육은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층을 포함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먼저 시행하고, 근로자 등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른바 솔선수범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교육 자료를 만들라고 경제교육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경제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경제교육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만들었고, 경제교육의 시행 여부를 가지고 해당 기관장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교육 후에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수단을 통해 점검하기도 하였다. 정책의 효과는 정책 내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교육에서도 적용되었다.

제2절 경제교육 추진 체계

1. 정부의 경제교육

정부의 경제교육은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제교육 초기에는 경제안정화시책의 성안을 담당하였던 경제기획원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기획원 중심의 경제교육은 1979년 4·17 안정화 시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그 해 1월에 발간된 『19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이라는 대통령 연두 순시용으로 제작된 홍보 책자가 그 효시다. 이 슬라이드와 해설 책자는 정부 각 부처 공무원, 경제 단체, 언론인 등은 물론 각종 교육 기관 등에 배포되어 지속적인 홍보 자료로 활용되었다.⁵⁾

4)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교육종합계획』, 1981.

5) 김흥기,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경제교육은 전두환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강력한 지시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안정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제교육 실시를 지시하였다. 정부는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훈령으로 기획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국민 경제홍보기획단’이라는 작업단을 구성하였다. 비록 과(課) 단위이지만, 이 조직은 경제교육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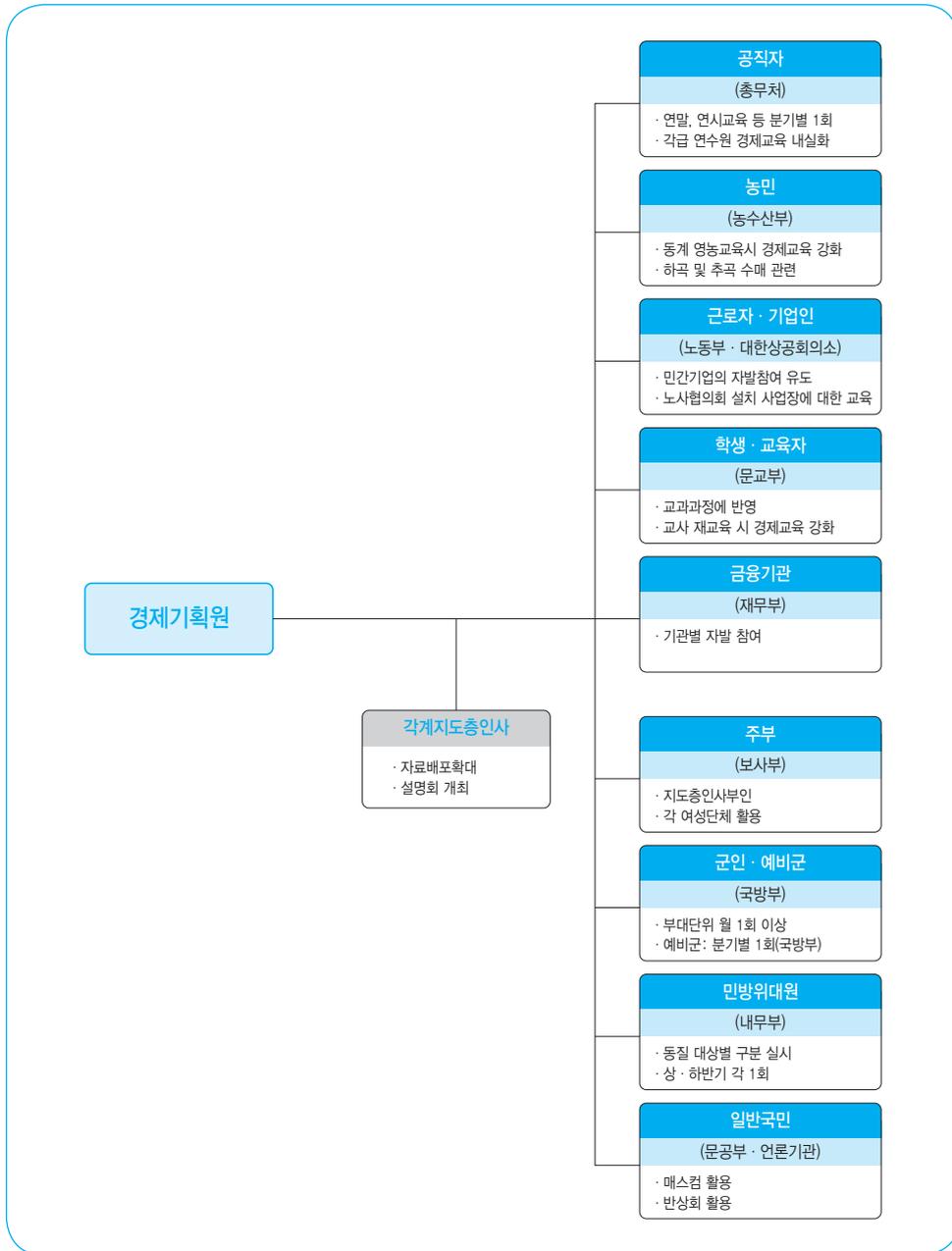
1982년에는 국(局)단위의 ‘경제교육 기획관실’로 확대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직에서는 강의, 연수, 슬라이드, 팸플릿 제작, 토론회 개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제교육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제교육 중추기관의 구성과 함께 각 부처·기관도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전 군(軍)과 그 가족에 대한 경제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총무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은 경제기획원이 기본 교육 자료를 제작·공급하는데 협조하고, 각 분야별·문제별 경제과제와 대책에 대한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언론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KBS는 ‘대국민 경제교육프로그램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관련 보도 해설, 드라마 등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경제교육 추진 초기의 기관별 업무(〔그림 3-2〕 참고)를 보면 경제기획원은 경제교육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정신교육의 체계 아래 연간 종합계획, 분기별 중점사항 등을 작성·운영하고 각급 기관의 분기별 실적을 종합·평가하며 교재·자료의 연구개발 및 지원, 강사 양성 등을 담당하였다. 각급 기관은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⁶⁾

6)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교육은 왜 하는가』, 1985.

그림 3-2 | 정부의 경제교육 실시체계도



출처: 대한상공회의소(1985).

1989년 경제기획원은 ‘경제교육기획관실’을 ‘경제교육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교육기획과와 교육홍보과, 교육조사과를 각각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경제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설립하여 경제교육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1991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합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로 재편되었다.⁷⁾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된 계기는 무엇보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던 경제교육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1994년에 정부 안의 경제교육 전담 조직인 경제교육기획국이 폐지되고 과 단위로 축소되면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13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2004년 민간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를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5월에는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바 있다.

2. 민간의 경제교육

당시 경제교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의 주체가 다원화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관련단체 상호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4년 8월 민간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민간경제교육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였으며, 기업체의 경제교육 담당자·교원 등에 대한 연수와 경제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하였다.⁸⁾

1988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경제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산하에 경제사회개발원을 설립하여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이나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들도 시민들의 경제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이를 실천하였다.⁹⁾

1990년대 초반에는 정부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공기업체, 연구원, 민간 사회단체, 각종 협회, 학교, 언론기관 등에 의해 활발히 경제교육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91년,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주도로 학계와 민간 경제교육 관련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한 한국경제교육협의회가 창립되었다.

7) 김경근,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8) 이상태, “우리나라 시민경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9) 김경근,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 제 3 장

그런데 정부에 의해 설립된 경제교육 전문기관인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기존 경제교육 기관이 수행했던 역할을 대체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경제교육 전담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의 기능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이다가 경제교육의 구심체로서 제대로 자리도 잡아보지 못한 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폐합되기에 이른다.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설립을 주도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통·폐합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경제교육 수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갖 출범한 한국경제교육협회도 와해되었다. 이에 우리의 사회경제교육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¹⁰⁾

이후 민간에서는 경제단체, 소비자·금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소비자, 금융교육 등을 전개해 나갔다.

정부 및 민간의 주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 정부 및 민간의 주요 경제교육 주관기관 변화

| 기관명 | 일자 | 내용 |
|----------------------|-------|--|
| 경제기획원 대국민홍보기획단 | 198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기획원 내에 차관보를 단장으로 나라경제가 처해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함 경제교육이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 1981년 11월까지 존속 |
|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관실 | 198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홍보기획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조직화됨(국급 조직) 슬라이드, 팸플릿, 강의 연수,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교육활동 |
| 민간경제교육협의회 | 198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 참여단체간 경제교육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교육 목적으로 함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무국 담당, 기업의 경제교육담당자·교사들의 경제교육 연수, 교재 개발·보급 |
| 경제사회개발원 | 198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본주의체제에 기초한 우리 경제체제 이해교육 |
|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 | 198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기획관실이 확대·개편 1994년 폐지, 과단위로 축소 |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198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 정부출연기관으로 변경 1991년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로 흡수됨 |
|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 연구소 | 199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및 관계기관 공무원 기타단체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실시 |
| 청소년금융교육 위원회(사) | 200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및 매장을 중심으로 발족(허가기관 금융감독위원회) |
|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 | 200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주도로 13개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발족 |

10) 전계서.

| 기관명 | 일자 | 내용 |
|----------|-------|---|
| 경제교육협의회 | 200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주도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를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로 확대 개편 KDI 내에 경제교육협의회 사무국 설치 지역경제교육센터 1차 지정(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 재정경제부) |
| 한국경제교육협회 | 200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 확대 지정(2차 : 강원, 제주, 충북, 전북, 경남 추가, 3차 : 충남, 전남 추가, 총 11개 지역 : 기획재정부) |

출처: 박용성 외, 「경제교육주관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3.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4장

1980~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1절 198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2절 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1980~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1절 198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1. 경제교육 목표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이로 인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었다. 연 10~2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고,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제품 가격을 다시 올림으로써 한국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위주 정책에서 안정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 단순한 안정화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즉,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시책이었다. 경제안정화시책은 각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인 이해와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이었다.

19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경제교육은 바로 경제안정화시책을 한국경제에 안착시키기 위해 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다. 당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가파른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추곡수매가의 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농민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여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였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경제안정화시책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즉,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은 물론 국내외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해야 했다. 임금동결과 추곡수매가 억제가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근

로자와 농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대국민 경제교육이었던 것이다. 당시 대국민 경제교육은 경제안정화시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필요성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다시 말해 초기 경제교육은 경제안정화시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경제 원리를 알리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교육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경제교육의 목적 및 배경에 대해 당시 경제교육에 직접 참여했던 사공일 前재무부장관(KDI 수석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80년에 시작한 경제긴축을 1984년까지 지속하던 때쯤에 추곡수매가 동결, 예산 동결, 공무원 봉급 동결로 인해 이어진 공공기관의 봉급 동결 등 정부가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 저항이 너무 세다보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필요했다. 즉, 정부가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경제교육과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했다.”

정부는 경제안정화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19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대국민 경제교육을 시작했다. 물론 이 책자가 정책홍보의 수단도 가지고 있었지만, 혹자는 이것이 한국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진행한 경제교육의 시작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당시 경제교육에는 정부는 물론 많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의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해 경제 분야 내용을 대폭 늘리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내용은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생활경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더불어 다양한 시청각 교재들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1980년대를 넘어 한국이 오늘날까지 경제교육을 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교육은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판단의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후생 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적기가 청소년기라는 것에 기초를 둔 목표라고 하겠다.

2. 경제교육 성과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전방위적인 대국민 경제교육은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경제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고속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제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한국경제가 내실을 기하는 안정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 경제교육을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강경식 전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당시 차관보)는 저서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통해 경제교육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80년 초에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각 부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11개 대도시에 파견해 지방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시책을 설명하고

각계의 건의를 들었다. 이어 '같이 생각해야 될 나라경제'라는 자료를 만들어 한국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

기업·농민·근로자·소비자들이 경쟁적으로 바라는 요구와 그 요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서로 다른 요구의 상호 충돌을 간명하면서도 절실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거나 어려움을 다른 계층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일대 반성을 촉구했다. (중략)

경제안정화시책에 대한 반대론이 거셌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해 온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지지 공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었다. 경제기획원과 KDI가 함께 3개 반을 편성해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상공회의소 및 대학 주최로 상공인·대학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국무총리의 지시로 '함께 극복해야 할 경제난국'이라는 슬라이드를 제작해 1980년 말 두 달에 걸쳐 2만 6,000개 기업 305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켰다.”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경제교육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강두 전 국회의원(당시 경제기획원 경제교육담당 국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우선 각 지방, 정부의 산하기구, 정부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시작했다.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각 기관에 가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경제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꼭 보고를 했다. 청와대도 이를 긴밀히 챙겼다. 각 기관에는 경제교육담당관실이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민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공직자들도 경제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도 경제교육이 실시되었다. 각 기관에는 경제교육과 관련된 목표가 하달되었고, 일주일에 몇 번은 경제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발연대 시절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면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나 기업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경제교육을 주관했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나 기업인, 근로자나 농민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제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경제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근무평점에 반영이 되었다. 경제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일종의 불이익이 가해졌던 셈이다.”

한편, 정부는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국을 적극 활용하였다. 방송을 통해 직접 경제교육을 수행한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당시 KDI 수석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국의 MBC에서 『물가의 속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은 어렵고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쉬운 말을 사용하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소개했다.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을 거쳐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보여주었고, 그 후에는 은행창고에 가서 저축하는 사람을 만나고, 백화점 소비자, 정책하는 사람 등을 직접 인터뷰하고 설명했다. 당시 모니터링 결과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두 번째는 세계경제 상황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한국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진국 경제도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의 주문사항이기도 했으며,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실업’의 고통이 있었고, 프랑스는 ‘국제수지’, 독일은 ‘사회복지 문제(지나친 사회복지 등)’, 미국은 ‘쌍둥이 적자(실업, 경상수지 등)’ 문제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잘하고 있던 나라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프로그램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을 섭외했다. 밀턴 프리드먼, 로렌스 클라인, 레온티에프였다. 토빈도 초청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장관들도 초청했다. 또한 미 중앙은행(Fed)의 헨리 윌릭스, 미국의 알렉스 리브린, 시중은행 관계자, 학자, 영국과 프랑스 장관들을 초청했다. 또한 재미를 높이기 위해 영국에 가서는 실업수당 받는 곳에도 가보고, 흥미를 끌기 위해 금문교, 백악관, 유럽 관광지 등 유명지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 3편 만들었고, MBC 9시 뉴스 이후에 방영되었다. 뉴스 방송 중에 광고도 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제교육도 중요했지만, 경제의식이 형성되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에도 매진했다. 임춘순 세종대 교수(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는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우선 초·중·고 경제 관련 교과체계 및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편 당시 통합 교과였던 초등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의 경제 관련 교과 편제 등을 개편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교육과정 작업을 위해 주요대학 경제학 및 사회과 교과 교수 및 현장 교사, 그리고 KDI 등 연구기관의 경제학 및 경제교육 전문가 20여 명의 연구 집필진이 구성되었다.

개정 전까지 경제는 독립 교과목이 아니었다. 사회분야 통합 교과목의 일부로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정치·경제’라는 독립 교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경제 교과목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당시 교양 선택과목으로 6과목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이었고, 교양 선택과목으로 ‘생활경제’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 경제교육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났고, 후반에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많은 시도와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경제교육의 효과로 당시 국민들의 상당수가 GNP 개념 등의 경제적 소양을 쌓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국민 경제교육은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연 10~25%에 달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10% 이내로 안정되고, 1980년대 중반에 가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제2절 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1. 경제교육 목표

1990년대 경제교육은 1980년대의 다소 의무성을 가진 정부 주도의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민간부문이 가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국민 경제교육의 목표는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시장경제 원리가 중요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민주화되면서 이념갈등이 심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체제 유지가 필요했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이 고속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문화 등 국민들의 경제의식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개방화·민주화·자율화가 진전되었고,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기조는 더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필요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의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대국민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1989년에 국책연구기관인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하 국경연)을 설립하였다. 즉, 국경연은 동서냉전으로 이념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설립 목적의 하나로 삼아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시키는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에 매진하게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는 민주화의 진전 등으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정책들이 잘 추진되지 않아 한국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적극 추진했다. 즉, 정부가 생산한 각종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일반국민들은 물론 학계·기업·기관에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당시 경제교육과 정책홍보를 담당했던 장석준 경제기획원 과장(현 한서대학교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라도 국민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정책 홍보의 측면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정책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배경이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원리를 알려주는 데도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각종 해설서를 많이 발간하였다. 정책이 나오면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해석을 내놓듯이, 정부가 직

접 정책의 해설자료를 내놓았던 것이다. 정책의 배경과 경제 원리 등을 해설자료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당시 나와 동료들이 경제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만든 도식이 있다.

경제 정책의 효과 = 경제정책 내용의 우수성 × 국민의 수용·이해·신뢰

예를 들어 정책의 내용이 90점짜리인데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해나 신뢰, 수용 등의 측면이 50점 밖에 안된다면 경제정책의 효과는 45점짜리 밖에 안된다. 정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악용하는 경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게 되면 정책 추진이 곤란하게 되므로 실제 못지않게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려면 정책 내용에 못지않게 경제교육이나 정책홍보도 중요하다. 특히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민주화가 진전된 19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1990년대 경제교육은 1980년대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소, 대학 교수 등과 경제현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 경제교육 성과

1990년대에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 한국개발연구원에 흡수 통합)과 공동으로 수많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공무원·교사·언론인·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 및 대상자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관련 정책담당자와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지방을 순회하며 지역 상공인들과 정책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지방에 알리고, 지역의 민의를 중앙정부가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알리는 홍보의 개념도 없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목적도 컸다. 즉, 1990년대는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이 약화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여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각종 경제정책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많이 했다.

한편, 당시 정부와 KDI는 교육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등 간접적인 경제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90년대 정부의 경제교육 성과에 대해 장석준 한서대학교 부총장(당시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의 과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경제기획원의 경제교육 조직은 기획단이라는 임시 조직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1989년에 경제교육기획국이라는 정식의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그 때 월간 『나라경제』라는 정책정보 잡지를 창간하였다. 나의 아이디어로 발간을 하

게 되었는데,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이런 잡지가 지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경제』를 제작한 이유는 당시 경제 정책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의 장점은 집필진이 정책을 직접 생산하는 과장급 관료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 책의 발간 취지를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잘 말씀드려 허락을 맡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예비비를 따내 발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발행인은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은 경제부처의 과장급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의 정부부처들이 모여 있던 과천 청사 안에 ‘경제자료안내실’을 설치하고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나 발간자료를 복사 등의 수단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였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 자료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보니 기업이나 교수와 같은 학자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경제 관련 상담전화도 운영하였는데 경제 부처의 공무원들이 직접 응대를 해주어 인기가 많았다. 당시 상담 전화의 이름을 ‘우리의 경제’로 지었다. 인기가 너무 많아 전화 연결이 안된다는 민원도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정부가 추진한 대국민 경제교육 및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정책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책 환경이나 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앞에 언급한 경제자료안내실을 개설한 것이 그 예이다. 사실 누구든 자기 자료를 주기 싫어한다. 과거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다. 당시 경제교육은 정부의 정보공개 문화를 만들어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물론 이를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다.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정책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많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한국에서의 경제교육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정책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측면이 강했다. 한편으로 이때 크게 늘어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은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기능과 역할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과 중요성이 커졌다.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5장

경제교육 추진방향과 세부내용

- 제1절 경제교육 추진방향
- 제2절 경제교육 수단 및 내용
- 제3절 주요 경제교육 사례
- 제4절 1990년대 이후 경제교육

경제교육 추진방향과 세부내용

제1절 경제교육 추진방향

1. 경제 정책 및 교육 홍보

1980년대 초 시작된 대국민 경제교육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교육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면 과제와 정책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했다. 이를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자 했다.

당시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경제정책인 안정화 시책은 국민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이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려 했다. 안정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물가를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수단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지 먼저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했다.

정부는 입안한 주요 경제정책별로 경제교육 홍보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정책 집행의 성과를 제고해 나갔다. 주요 경제시책에 관한 강의, 언론 토론회, 시청각 교재, 정기 간행물, 우편물, 기고, 동영상 교재 보급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홍보 방식을 사용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활동과 동시에, 여론조사도 병행하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수요와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 반응을 파악했다. 이와 같은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2. 국민 맞춤 교육

대국민 경제교육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소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사항 중 하나는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의 난이도 조절이었다. 정책 초기에는 주로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경제용어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어 수단과 표현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경제교육의 최종적 대상은 전 국민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상식이나 용어에 관해 생소해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대통령은 경제교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수단 다양화와 난이도 조절에 매우 애썼다. 국민 수준에 눈높이를 맞춘 경제교육 및 정책 홍보를 지향했다. 경제교육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담은 국가기록 자료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례로 1982년, 직장교육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총무팀이 작성한 경제교육 강사단의 청와대 보고 결과를 들 수 있다. 보고서에는 국민과의 소통 및 정책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 및 다양한 매체 사용에 관한 세심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석한 101단 경호원에게 하동선 차관보의 브리핑 내용을 이해하겠냐고 질의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¹¹⁾ 강의식 교육은 지양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것을 권했으며 특히 슬라이드, 토의, 강의가 삼위일체가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교육 필요성에 대한 강의는 1960~1980년대 세계경제 흐름을 간략히 만화식으로 보여주길 요청했다. 보고된 경제교육 슬라이드는 말이 너무 빨라, 아나운서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말하되 필요시 반복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슬라이드 매수를 늘려 설명력을 높이고 청중 위주의 설명을 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정부가 전달력 있는 경제교육 수단과 강의 내용의 난이도 조절 때문에 매우 고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82년 말에 시행된 공직자 경제교육에 관한 국무조정실 총무팀의 기록 자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교육 방법, 경제교육의 필요성, 경제교육 내용, 경제교육 슬라이드, 향후 경제교육 계획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경제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공직자 경제교육이 지식 전수가 아닌 이해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청각 교육과 토론 활동 등을 병행하며 기억에 남는 경제교육이 될 수 있게 기획하도록 교육 집행 담당자에게 지시되었고, 설득력 있는 교육방법으로 개선해 나갔다.

기록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이 경제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분야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11) 101단 경호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국가 경호원.

3. 단계적 교육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교육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제정책과 경제교육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바는 국민들이 일반적인 경제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시장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주도하여 입안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상위에서 하방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켰다. 교육 주제와 교육 수단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여 이루어졌다. 고위 공무원들을 일순위로 경제교육을 시행한 이후,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점차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교육을 시행했다. 공직자가 국민보다 경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녀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는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시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어갈 때쯤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혀 갔다.

주요 경제교육 대상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듯이, 경제교육의 내용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되었다. 단순히 주요 경제교육 대상이 변함에 따라 그 내용과 난이도, 교육 수단과 매체가 변경되는 구조를 넘어 정책방향 및 사회적 흐름과 관련하여 경제교육 주제에 변화가 있었다. 대국민 경제교육 초기에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았던 안정화 시책을 이해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교육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주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내용과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로 예산을 절약하여 투자 등 생산적인 방향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 외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상적 성장 속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기술혁신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내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나 안정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물가가 안정되어 가면서 교육 내용은 점차 일반적인 경제상식 및 경제시사, 경제정책 등에 관한 주제에 중점을 두었다. 주로 당시의 경제동향과 대내외 경제여건, 1980년대 경제운용의 과제와 방향 등을 교육시켰다. 이 외에도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환경, 자원, 인구, 기술개발 문제 등을 다루며 경제와 밀접한 사회문제들을 강조하였다. 경제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경제교육 내용이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동시에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주체 역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교육에 비해 규모가 크거나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커짐에 따라 민간 경제교육 단체와 기업체, 국가 경제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가 경제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활동을 제공했다.

대국민 경제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주체 등 전반적인 요소들이 중앙집권적인 성격에서 분권적인 성격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정책 초기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형태의 교육이었다면 정책 후기에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를 배양하는 형태의 교육이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단계적 정책변화 과정과 국민의 이해 및 참여 수준 변화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경제교육 수단 및 내용

본 절에서는 당시 정부 주도 경제교육의 개괄적인 수단에 대해 소개한다. 제 5공화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이 시작된 것은 1981년 가을 추곡수매 가격이 결정되던 시점부터이다. 추곡수매 가격 결정에 관한 교육자료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을 펼쳤다. 경제정책의 타당성을 소개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무원, 교수, 군인,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등 전 계층에 걸쳐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당시의 경제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형태는 국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알리는 고지(告知)홍보, 기존 정책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한 설명홍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지지획득 홍보, 국민들의 경제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계몽 홍보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경제정책 홍보 물로는 리플릿, 팸플릿, 소책자, 만화, 포스터 등의 인쇄물이 주로 사용되었고, 비디오 및 TV매체 등 영상물도 사용되었다. 이 중 경제부처에서는 특히 리플릿을 많이 사용했다. 이유는 4~12 페이지 정도 분량의 전단형 리플릿이 가장 읽기에 적절했고, 당시 필요성이 높았던 위기상황 타개용 홍보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1. 시기별 경제교육 수단 및 내용

경제교육 수단을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국민경제교육 정책 추진 초기에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슬라이드가 중심 교재였다. 교육 대상은 일반국민 위주보다는 주로 정책 이해당사자, 지식인층,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제기획원 중심의 경제교육은 1979년 4·17 안정화시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그 해 1월에 발간한 '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이라는 홍보 책자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슬라이드이다. 경제기획원은 대통령 연두순시용으로 본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부 각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 단체, 언론인, 노동조합, 농협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교육기관, 새마을 운동 연수원, 금융단 연수원 등 각종 민간 연수원에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경제정책 홍보 및 교육 수단으로써 슬라이드가 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수정되면서 발전되었다.

■ 제 5 장

1979년부터 1982년 사이에 경제교육을 위해 제작되고 활용된 주요 슬라이드 목록과 내용은 <표 5-1>와 같다.

표 5-1 | 주요 경제교육 슬라이드(1979~1982)

| 슬라이드 명 | 배포 일자 | 내용 |
|----------------|----------|--|
| 80년대를 향한 새 전략 | 1979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연두순시를 위해 만든 홍보 책자(슬라이드)로 경제기획원 중심의 경제교육 호시 정부 각 부처 공무원, 경제 단체, 언론인 등은 물론 각종 교육 기관 및 연수원에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자료로 활용 |
| 경제발전과 소비 건전화 | 197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2차 석유파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전 국민의 소비합리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제작 |
|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 | 198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두순시 때 제작하였으며 1980년 2월 각 부처 차관을 단장으로 한 홍보반을 전국 11개 도시에 파견 지방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시책을 설명 |
|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 1980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류 가격 59% 인상 배경 등을 문답식으로 풀이 |
| 같이 생각해야 될 나라경제 | 1980년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제작 1980년 7월 하순에는 경제기획원과 KDI가 함께 3개 반을 편성(영남: 강경식 차관보 담당, 충청·호남: 이형구 정책국장 담당, 강원·중부: 김만제 KDI 원장 담당)해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상공회의소 및 대학 주최로 상공인, 대학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
| 함께 극복해야 할 경제난국 | 1980년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보부 주최 지역별 안보정세보고회에 사용 '나라경제'와 '경제난국'을 전국 근로자에게 홍보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1980년 12월 초부터 두 달에 걸쳐 2만 6,000여 기업 305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실시 상공부는 198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22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실시 지방순회 중심의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벗어나 근로자 계층까지 교육 확대 |

1982년 초부터는 언론기관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정책홍보성 성향이 강한 슬라이드를 교육용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경제교육 매체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그 예시는 매우 다양한데, 우선 보도 프로그램 중 경제 관련 보도와 해설을 강화하며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였다. 드라마도 활용하여 경제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일반 드라마에서 경제 관료를 언급하며 경제에 관한 관심을 이끌도록 의도했다. 경제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기사 및 광고방송 역시 확대 되었고, 특히 집합교육을 통한 강의를 시행하며 다양한 교재를 공급하고 경제 강사를 양성했다. 이외에도 책자, 영화, 만화, 팸플릿,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였다.

표 5-2 | 대상별 경제교육 교재 예시(1982~1983)

| 분류 | 82년 하반기~83년 상반기 | 83년 하반기 |
|----------|-------------------------|---------------------------------|
| 고급용 | 우리 경제의 현황과 운용 방향 | - |
| 교관용 | 경제교육교재 | 우리 경제의 현실과 과제 |
| 기업인·근로자용 |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 복지사회 근로윤리와 기업이 정신, 중소기업의 역할과 진로 |
| 농민용 | 농업과 정부지원 | 농촌경제 발전의 길 |
| 상인용 | 상도의 확립과 유통근대화 | 유통산업의 발전과 유통근대화 |
| 대학생용 | - | 경제성장과 분배 |
| 주부용 | 소비절약과 국산품 애용의 국민 경제적 의의 | 합리적 가계운용 |
| 일반인용 | 경제와 우리생활 |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교육은 왜 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 1985, p.72.

당시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경제교육 교재와 소재는 주로 경제기획원이 제공하였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교육 논리를 개발해 주는 기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사용한 매체는 <표 5-3>에 정리하였다.

표 5-3 | 경제기획원 주도의 주요 매체

| 매체명 | 내용 및 특징 |
|------|---|
| 슬라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자를 졸지 않게 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슬라이드 제작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 만화 기법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우, 고우영, 윤승원 등 유명 화백 동원 내레이션을 읽는 성우로 방송국의 유명 아나운서나 성우들을 활용하였으나 경제 이해가 부족하여 감정 전달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음 경제기획원의 직원 중 목소리가 좋은 직원을 내레이터로 발굴하여 활용함 |
| 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만화 예시로는 '밥통 부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기획관실이 최초로 만든 만화 - 밥통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지적 -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서는 오히려 수입 자유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견해 제시 |
| VT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KDI 사공일 부원장이 VTR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로 등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해설자로 출연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외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취재 |

| 매체명 | 내용 및 특징 |
|-----|---|
| 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표 공중파 방송인 KBS와 MBC는 다양한 경제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 중 방송 역할이 컸음 - 매일 저녁 9시 뉴스가 끝난 후 KBS '오늘의 경제', MBC '5분 경제'를 방영 - 경제교육기획관실은 두 방송사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몇 달간 원고 제공하였고, 과장 및 고참 사무관을 방송사에 파견 • 경제교육이 정착되면서 TV 경제 방송은 중단되었으나, 제 6공화국 말기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자 1992년 4월부터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방송사에서 5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MBC '경제 산책', KBS '경제를 압시다.', SBS '잠깐 경제 메모') - 일상생활의 경제 문제를 매우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음 - KBS는 허수경, SBS는 송선경 씨가 리포터로 나와 스타로 등극 • KBS '경제를 압시다.'는 이계익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자 출신인 이계익은 김재익 경제수석의 천거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태였으나,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KBS 해설위원으로 들어가 '경제교육방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
| 광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직접 나섰다라는 점에서 광고 기법이 획기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신문 광고의 경우, 추석 과소비를 진정시키는 내용으로 한국 광고 대상의 '공익 부분 우수상' 수상함 |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직자를 경제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언론계, 종교계 인사와 정책 토론회를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집합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일례로,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도 경제교육을 통해서 안정화 시책에 대한 정책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는 학교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제교육의 대상을 보다 넓히며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였다. 경제부처 간부들과 지방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국 45개 대학에서 경제 특강을 개설해 경제부처 간부가 직접 출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배 문제에 관한 계층 간의 갈등, 수입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 대립을 해소하는데 경제교육의 최대 역점을 두며 국민들의 화합을 유도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대국민 경제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다. 연구 활동에 대한 예시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경제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후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로 변경되었음)'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경제단체·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교육추진단체를 1988년 하반기에 재단법인형태로 새로 설립하였다. 경제교육추진단체는 민간경제단체의 출연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기업종사자·소비자·주부·학생 등 국민 전 계층을 상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에 필요한 경제 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시민에 대한 경제상식 및 생활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된 정부 주도의 사회경제교육 형태가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교육의 형태로 점차 변형되었다. 1991년에는 학계와 민간의 경제교육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경제교육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되었던 예로 198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경제사회개발원’이 우리 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의 경제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중·고등학생의 경제 관련 교과서 개편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 인식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는 경제통계 등 각종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을 요하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 모든 경제통계 및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시행되었던 경제교육이 점차 민간에 의해 기획되고 실시되어 갔지만 이러한 과정 역시 정부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장경제 바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시대별로 정리해본 당시 국민경제교육 정책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고위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가 이후 교사, 일반 상인, 주부, 학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초기에는 안정화정책을 위한 정책홍보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제상식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토론회, TV방송 등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이 올바른 경제의식을 키우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 정책의 끝 무렵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경제교육 공급 단체가 생겨났음이 당연하다.

2. 경제교육 수단에 대한 국민 반응

그렇다면 당시 경제교육 수단 중 국민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매체는 무엇이었을까?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한 홍보 중 가장 호감 가는 수단은 텔레비전을 통한 공익광고 형태의 홍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문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의 선호는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고, 신문광고 형태의 홍보에 대한 선호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했다. 특히 40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다.

표 5-4 | 경제정책 홍보방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 조사 결과

(복수응답, 총 200%)

| 홍보의 방법 | % |
|-------------------------|------|
| 텔레비전을 통한 공익광고 형태의 홍보 | 86.2 |
| 신문광고를 이용한 홍보 | 50.5 |
| 포스터를 이용한 광고 | 29.9 |
| 비디오 등 시청각교재를 이용한 홍보 | 9.3 |
| 팸플렛과 같은 소책자 발행을 위한 홍보 | 8.4 |
| 리플릿과 같은 2~6 페이지의 전단형 홍보 | 6.4 |
| 만화를 통한 홍보 | 5.9 |
| 보다 두꺼운 정식책자를 통한 홍보 | 1.1 |
| 기타 | 1.3 |

출처: 한정호,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 p.29.

경제 관련 홍보물 접촉 경험에 대한 분석을 보자면, 포스터를 제외한 배포용 경제홍보물 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은 팸플릿(48.5%)이었다. 그 다음은 리플릿(17.1%), 일반 책자(11.8%), 만화(10.9%), 편지(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형태로는 회보(반상회보), 부채 등과 같은 판촉성 홍보물 등이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20대와 30대가 만화 형태의 홍보물을 접촉한 경험이 다소 많았고, 대학생은 리플릿을 접한 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 경제 관련 홍보물 접촉 경험

(단위: %)

| | 만화 | 리플릿 | 편지 | 팸플렛 | 일반책자 | 기타 |
|--------|------|------|-----|------|------|-----|
| 전체 | 10.9 | 17.1 | 3.0 | 48.5 | 11.8 | 8.6 |
| - 나이 | | | | | | |
| 20대 | 14.9 | 19.2 | 2.1 | 42.0 | 12.5 | 9.3 |
| 30대 | 13.3 | 15.2 | 3.7 | 45.9 | 13.0 | 8.9 |
| 40대 | 8.0 | 19.4 | 3.0 | 49.8 | 11.9 | 8.0 |
| 50대 | 5.4 | 13.8 | 3.4 | 59.6 | 9.9 | 7.9 |
| - 교육수준 | | | | | | |
| 고졸 | 10.3 | 11.8 | 4.8 | 50.0 | 15.3 | 7.0 |
| 대재 | 17.9 | 27.4 | 2.1 | 32.6 | 7.4 | 8.3 |
| 대졸 | 9.9 | 22.0 | 1.4 | 49.9 | 8.5 | 8.5 |
| 대학원 이상 | 11.8 | 9.8 | | 56.9 | 13.7 | 7.8 |

출처: 한정호,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 p.30.

정부 주도의 홍보물은 일반 광고물들과의 주의 끌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림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어려운 경제용어를 쉽게 풀이하려고 애썼다. 편집도 보다 세련되게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화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위에 언급된 경제교육 수단과 내용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결과물로 교육 수단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보다 나은 경제교육 수단과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부처들과 관련단체들이 여러 노력을 했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교육 수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주요 경제교육 사례

지금까지 1980~90년대의 정부 주도의 경제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어떠한 수단으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경제교육의 개괄적인 수단과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당시 정부가 사용한 매체와 교육과정, 그리고 사례별 여러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의 국민 경제교육 대상은 크게 공무원과 대국민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 초기에는 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점차 대국민으로 범위를 늘려갔다. 동일 분류 내 경제교육 사례는 시간 순으로 차례로 나열하였다. 경제교육 사례의 전반적인 특징과 교육수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갔고, 이에 맞춰 교육 매체 역시 다양해졌다. 다음 소개되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공무원 대상 단체교육

가. 1981년 ~1982년

공무원 대상 단체교육은 고위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시작되었다. 1981년 재무부의 경우에는 경제교육 대상으로 외청과 산하기관, 국토통일원을 맡게 되었는데 4개 그룹으로 나누어 11월 27일부터 1회에 2일씩, 1일 세 시간 교육을 외환은행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과 사무관급으로, 산하기관은 임원급과 부장급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반장은 하동선 제2차관보가 맡았다.

교육내용은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시책 운영방향, 80년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다. 총 6시간 중 하동선 차관보가 1시간을 맡고, 1시간은 슬라이드 교육, 나머지 4시간은 KDI와 국제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맡았다. 경제정책에 관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 힘썼다.

정부는 1981년 11월 25일부터 1982년 1월까지 하루 6시간 총 3단계로 나누어 전 공무원 및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 등 모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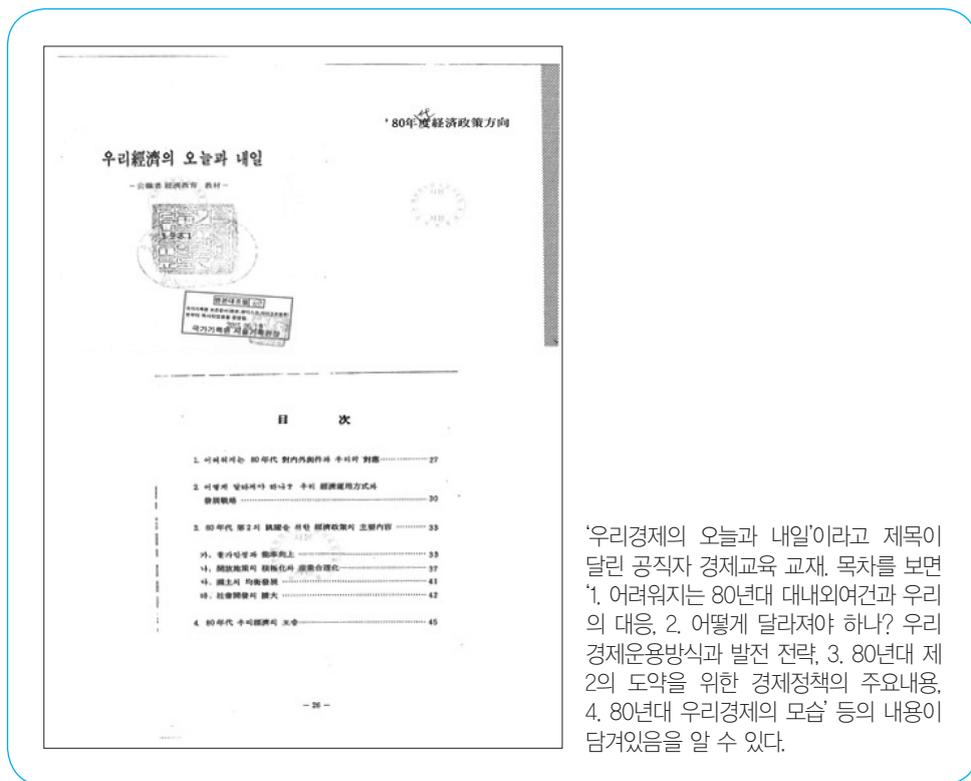
■ 제 5 장

따라 총무처 주도로 이 계획이 만들어 졌다. 당시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80년대의 제 2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 경제교육이 구성되었다.

1단계(1981년 11월 25일부터)로는 재경 5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을, 2단계(1981년 12월 14일부터)로는 시·도청 소재지 근무 5급 이상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3단계로(1982년 1월 중)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산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하루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총 6시간씩 실시되었고, 주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1980년대 경제정책 및 국제경제동향을 강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무원 경제교육이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당시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강사는 경제부처 차관보를 비롯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 30여 명이 맡았다.

그림 5-1 | 공무원 경제교육 교재(1981년)



‘우리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제목이 달린 공직자 경제교육 교재. 목차를 보면 1. 어려워지는 80년대 대내외여건과 우리의 대응, 2.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우리 경제운영방식과 발전 전략, 3. 80년대 제 2의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4. 80년대 우리경제의 모습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5월 중에는 전국 각 부처 및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2만 3천 7백여 명에게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5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지역 5급 사무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 1만 1천 7명에게 복무 자세 확립 등 의식개혁을 위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직자 기강 및 윤리관에 관련된 수업과 더불어 경제교육을 집중해서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의식개혁의 선도 집단인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1차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다시 직장에 돌아가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함으로써 전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다. 더불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나. 1983년~1984년

정부 주도의 공무원 단체교육은 일정한 주기로 단계적으로 계속되었다. 1982년 12월 22일부터 1983년 2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공무원과 각 산하단체 임직원 등 총 86만 명의 공직자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198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던 경제교육으로 1단계에서는 5급 이상 서울지역의 공무원과 산하단체의 부장급 이상 관리직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2단계로는 지방 도청 소재지 별로 공직자들에 대하여, 3단계로는 기타 직원에 대하여 각 기관장 책임 아래 직장 단위별로 교육을 하였다.

본 경제교육은 1980년대의 우리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직자가 제2의 도약을 위한 국민적 전진에 솔선수범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83년 연초에 정부는 1983년 한 해 동안 176개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 21만여 명을 포함한 총 86만여 명의 공직자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모든 공직자가 물가오름세심리 추방에 앞장서고, 우리경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직자와 전 국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관리직인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집체교육을 시키고, 6급 이하 공무원과 산하단체 과장급 이하 직원은 직장단위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 역시 총무처의 주도로 실시되었고, 관리직의 경우 4~5차래 더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학자 및 전문가의 강연 외에 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경제동향과 대내외 경제여건, 1980년대 경제운용의 과제와 방향 등이었다. 이외에도 자원·공해·환경·인구·기술개발 문제 등 선진조국 구현을 위해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교육을 시켰다.

직장교육은 각 기관장 책임 하에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후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였다. 총무처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형식적인 경제교육을 지양하려 했다.

■ 제 5 장

정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이 강사와 교육 자료를 지원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총무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정기적인 반복 교육 외에도 경제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대폭 보강하고 정신교육과 직무교육과정에 반드시 경제교육을 필수화하였다.

그림 5-2 | 1983년도 하계 공직자 경제교육 모습



출처: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83년도 하계 공직자 경제교육」, 국가기록원, 1983.

1983년에는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각계 지도층에 대한 경제부처 합동연수 형태의 경제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1984년에는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보사부, 동자부, 노동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기처, 서울시 등 12개 부처와 경제 4단체, 51개 대중소기업체, 국책은행 및 5개 시중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제기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원, 국토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총 52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외채와 저축, 외국인 투자, 수도권 문제 등 3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각계 지도층 인사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자료 배포도 더욱 확대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경제 단체 및 기업체임원, 경상사회계열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방부, 군부대 등 총 5,000명을 선정하여 경제교육 자료와 경제시책 자료를 수시로 송부하였다.

경제교육 자료는 1983년에 주로 제작·배포되었는데, '84년부터는 각종 자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송부되도록 배포체계를 세밀하게 구성하였다. 당시 제작된 경제교육 자료 및 정책 자료 목록은 <표 5-6>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교육자료와 경제정책자료로 구분되는데, 경제교육자료는 경제주체인 정부·소비자·기업에 관한 내용과 일반적 경제지식 등에 대해 다루었다. 경제정책자료를 통해서는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내용 및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라는 특성 상 정부 정책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문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공무원 경제교육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주제의 교육자료를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 1983년 제작되어 사용된 공무원 교육자료

| 내용 구분 | 자료명 | 제작기관 |
|--------------|-----------------|---------|
| 1. 경제교육자료 | | |
| 1-1. 정부정책 관련 | 1983 예산의 기본성격 | 경제기획원 |
| | 선진국으로 가는 길 | 경제기획원 |
| | 유통산업 발전과 유통 근대화 | 경제기획원 |
| | 농촌경제 발전의 길 | 경제기획원 |
| | 선진국을 향하여 | 경제기획원 |
| | 생산성을 높이자 | 경제기획원 |
| | 물가안정 시대를 연다. | 경제기획원 |
| | 추곡수매가 결정배경 | 농수산부 |
| | 한국 TQC의 나아갈 길 | 공업표준협회 |
| |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살길 | 대한무역협회 |
| | 상도의 확립과 유통 근대화 | 대한상공회의소 |

■ 제 5 장

| 내용 구분 | 자료명 | 제작기관 |
|-------------------|--------------------------|-----------|
| 1-2. 소비자 관련 | 소비생활합리화와 국산품 애용 | 경제기획원 |
| | 우리경제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자세 | 경제기획원 |
| | 저축과 합리적 소비 | 경제기획원 |
| | 만화 "어돌이와 어식이" | 경제기획원 |
| | 합리적 가게운영 | 경제기획원 |
| | 편리한 은행이용 | 대한금융단 |
| | 우리 경제의 현실과 진로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 | 잘사는 길 저축하는 길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 1-3. 기업 관련 | 복지사회 근로윤리와 기업가정신 | 경제기획원 |
| | 중소기업역할과 진로 | 경제기획원 |
| | 중소기업의 역할과 진로 | 경제기획원 |
| 1-4. 경제일반지식 | 세계 각국의 1인당 GDP, GNP, 인구 | 경제기획원 |
| |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 경제기획원 |
| | 경제성장과 배분 | 경제기획원 |
| | 생산성과 노사관계 | 한국생산성본부 |
| | 생산성과 우리 생활 | 한국생산성본부 |
| 1-5. 기타 | 표준교재 | 경제기획원 |
| | 경제교육 슬라이드집 | 경제기획원 |
| | 경제교육교재 | 경제기획원 |
| | 나아지는 경제모습과 우리의 할일(강의안) | 경제기획원 |
| | 나아지는 경제모습과 우리의 할일 | 경제기획원 |
| |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 한국생산성본부 |
| | 번영의 가치를 | 전국경제인연합회 |
| 2. 경제정책자료 | | |
| 2-1. 국내경제 동향 및 정책 | 1983 경제운용계획 | 경제기획원 |
| |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경제정책과 행정적 과제 | 경제기획원 |
| |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 경제기획원 |
| | 최근 물가동향과 금년도 전망 | 경제기획원 |
| | 선진조국 창조와 경제정책 방향 | 경제기획원 |
| |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선결과제 | 경제기획원 |
| |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제운용 | 경제기획원 |
| |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방향 | 경제기획원 |
|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상작업지침 | 경제기획원 |
| | 1983 예산편성 기본해설 | 경제기획원 |
| | 부총리 TV 경제해설 | 경제기획원 |

| 내용 구분 | 자료명 | 제작기관 |
|-------------------|---|-------|
| | 1984년도 예산안 (부총리 TV 대담) | 경제기획원 |
| |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 | 경제기획원 |
| | 국가예산 동결과 정책배경 | 경제기획원 |
| 2-2. 해외경제 동향 및 정책 | 세계경기 부양계획 | 경제기획원 |
| | Global Strategy for World Economic Recovery | 경제기획원 |
| | 동아시아의 성장과 구조조정 | 경제기획원 |
| |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제2도약 | 경제기획원 |
| | 최근 해외 경제동향 | 경제기획원 |
| | 일본과 서독의 가계저축 | 경제기획원 |
| | 최근 해외경제 동향과 전망 | 경제기획원 |
| | 국제원유 가격하락과 우리의 대응방향 | 통력자원부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교육은 왜 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 1985, pp.74~76.

2. 군인 대상 단체교육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대국민 경제교육은 공무원,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군인들에게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며, 당시 군복무 기간은 30개월 전후였다. 군인들도 군복무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군인 대상 경제교육은 민간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군부대로 찾아와 집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군복무를 하며 사병들 경제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던 한 부사관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82년 봄 정도로 기억하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우리 부대 전 장병들을 모아놓고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군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 고졸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온 군인들은 20% 전후였다. 심지어 중학교 졸업자도 일부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의 경제에 대한 상식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의 경제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 외부 강사의 경제교육은 매우 흥미롭고 신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강의를 했다. 지금도 그때의 강연 내용이 기억될 정도로 흥미롭고 의미가 있었다. 경제교육을 받고 난 얼마 후에는 부대 대항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부대의 경제교육을 독려했다. 즉 제법 두꺼운 경제교육용 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각 부대별로 40명씩 무작위로 선발해서 필기시험을 봤다. 당시 나는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아 경제교육용 교재를 요약하여 소속 부대 군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경제교육을 했다. 그때 분기마다 대회를 열었고, 몇 차례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경제교육 경험이 현재도 국내의 경제상황에 대해 늘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교육기획관을 맡고 있던 이강두 전 국회의원은 “경제교육에는 군부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비록 암기식 교육이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사병들의 경우 경제교육 평가를 받아 합격해야만 정기 휴가를 갈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회고했다.

군인 대상 경제교육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전투훈련만이 전부였던 군인들에게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해 전역 후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3. 학생 대상 단체교육

가. 1980년대 초반

정부는 경제현실의 올바른 이해와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1983년 4월부터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주로 공무원과 군인,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해왔는데, ‘전 국민의 경제인화’ 계획에 따라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개개인마다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경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대상을 중·고·대학생 전원과 초등학교 5, 6학년생까지 확대하였다. 대학생은 교양과목인 국민윤리 시간이나 본 강의 후에 교육을 받도록 했고, 초·중·고교생은 특별활동 시간이나 학급재량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 시간은 초·중·고교생은 1983년 중에 2회에 걸쳐 각각 1시간씩, 대학생은 3회에 걸쳐 각각 1시간씩 실시했고, 1984년부터는 교육 자료와 강사진을 확보하며 교육시간을 늘려갔다. 교육내용은 대학생의 경우 세계경제의 어려움, 국내 경제현황 및 국민이 해야 할 과제, 저물가의 필요성, 농정과 추곡가격 결정,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이 있었다. 교육 매체로는 주로 슬라이드와 VTR 등 시청각 교재를 사용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도 실시하였다.

나. 1980년대 후반

1986년, 정부는 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교생과 교원·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는 초·중·고교생 총 688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 절약과 저축 증대, 에너지 절약, 국산품 애용 등 학생수준에 따라 맞춘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자 했다.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도덕·윤리 등, 교과시간과 생활지도를 통해 일상 교육활동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글짓기, 사례 발표, 포스터·표어 전시, 웅변대회, 우수 국산품 전시회 등 경제교육행사를 학교별로 2종 이상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1987년 이후로는 경제교육은 청소년 시절부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 당시 초·중·고 12학년의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교과서 개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편 당시 통합 교과였던 초등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편제 등을 개편했다. 주요대학 경제학·사회학 교과 교수 및 현장 교사, 그리고 KDI 등 연구기관의 경제학·경제교육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였다. 개정 전까지 경제 과목은 독립 교과목이 아니었다. 사회분야 통합과목 안에 경제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치·경제’라는 독립 교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경제 교과목의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교양 선택과목으로는 6과목 정도가 추가적으로 존재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이었다. 또한 당시 교양 선택과목에 ‘생활경제’를 신설하였는데, 단지 교과목 설명과 경제정보 및 정책 설명이 아닌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전달하고자 힘썼다.”

당시 교과서 개편에 참여하였던 임천순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사회 교과목에 경제 및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려 애썼으며, 특히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노동 교육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가’와 같은 인식이 많았는데, 사실 본 목적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지식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 두 가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 이해와 경제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활에 접목 가능한 경제지식을 전달하고자 했고, 교과서 개편을 통해 경제 교과목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단순히 교과서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교재나 시청각 자료 개발에도 힘썼다.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부교재나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요 경제개념을 30개로 추리고 20분짜리 시청각자료(슬라이드)를 제작했다. 또한 경제 동화책과 어려운 경제 개념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만화도 많이 제작되었다. 경제 교과 비중이 증가하고 다양한 매체로 경제교육을 지원하였기에 학생들은 이전보다 체계적인 경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4. 중·고교 교사 대상 교육

한국 정부는 학교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고교에서 경제과목을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강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경우 중·고교에서 배운 경제교육이 평생 습득할 수 있는 경제지식의 대부분이고, 또한 청소년 시절에 형성된 경제의식이 평생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고교 교사들에게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사들 중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제과목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의 교사에게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면 해당 교사가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파

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 대상 경제교육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정부는 KDI 국민경제 교육연구소를 통해 1990년 초부터 25년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통 30시간씩 연수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180시간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교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경제교육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민간 경제교육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다.

5. 국민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1980년대 초에는 국민들에게 우리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 상식과 경제정책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1980년, 강경식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당시 KDI에서 재정금융실장을 맡고 있던 사공일 박사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것을 제의했다. 그래서 사공일 박사는 경제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MBC 9시 뉴스가 끝난 직후에 1시간 동안 방영되는 『물가의 속사정』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세편 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 제작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쉬운 용어로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공일 박사는 돈이 만 들어지는 과정부터 화면에 담았다.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을 보여주고, 은행창구에서 저축하는 사람,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사람,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 등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 우리 경제의 높은 물가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상당한 경제교육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나. 경제 해설 프로그램

1983년에는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중 경제해설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매일 저녁 9시 뉴스가 끝난 후에 KBS 「오늘의 경제」, MBC 「5분 경제」가 방영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경제 현황과 경제 상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경제교육기획관실은 두 방송사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몇 달간 원고를 제공하였고, 고참 사무관들을 방송사에 파견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한 국민 경제교육 효과에 기대하는 바가 컸고,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후 경제 해설 프로그램은 1990년대에도 진행되었다. MBC 「경제 산책」, KBS 「경제를 압시다.」, SBS 「잠깐, 경제 메모」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짧고 간단한 경제 해설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경제문제와 다소 심화된 내용의 경제정책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민들의 경제 상식 이해 제고에 일조하였다.

다. 드라마를 통한 경제교육

1983년 3월 28일부터 KBS 2TV는 새 드라마 「객주」를 방영했다. 김주영 작가의 대하소설을 영상화한 드라마로, 보부상과 관대, 백정 등 천민들을 주제로 이들의 상업행위를 주제로 삼은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근대 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전달했다. 「객주」는 일방적인 경제교육 드라마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활적인 경제드라마로 국민들이 어떻게 부끄러움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5-3 | 1983년 드라마 「객주」 관련 기사

**새드라마 「객주」放映
K2-TV 28일 부터**

◇...KBS 제2TV는조선시대의 뒷바라지인들의 사람과 비애, 풍류를 그린 새드라마 「객주」를 오는28일부터 방영한다.
작가 金周榮씨의 대하소설 「객

주」를 영상화한 이드라마는 보부상과 관대, 백정등 천민들을 주제로 이들의 상업행위를 중심으로 근대 상업자본의 형성·발전 과정을 담고있는데 1878~1885년까지 8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객주」는 일방적인 경제교육드라마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활적인 경제드라마로 우리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없는 경제활동을 할수있을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이드라마는 당시 서민들의 물질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감정과 사고방식 그리고恨과 풍류까지도 그리고 있다.

이 드라마엔 지난해 5월 필립트 金영철과 결혼후 연기생활을 중단했던 아기얼마李文姬(사진)가 등장한다. 백정의 딸「월이」로 분장한 그녀는 조소사의 교전비로 장제가 많고 입기음변에 능한 호색한 최돌이의 아내가 되나 결국 청상과부가 되는 역을 맡는다.

기사 내용에서 '객주'는 일방적인 경제교육 드라마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활적인 경제 드라마로 우리들이 어떻게 부끄러움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새 드라마 객주 방영 K2-TV 28일 부터」, 1983.3.21.

6. 전문가 대상 토론회 개최

1985년 8월 27일부터 경제계에서는 경제대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금융계, 재계의 179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그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제대토론회는 어려운 경제문제를 놓고 각계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기에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견 공유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좁혀갔고,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다. 다만 전문가 위주의 토론회로 소비자 집단이 참석하지 않아 모든 이해 집단이 함께한 모임이 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소통을 통한 경제정책 시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7. 경제교육자료 개발

경제교육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는데 얇은 책자 형태의 교육 교재도 많이 사용되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발간된 경제교육 책자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례로는 '생선 반마리만 주세요.'를 들 수 있다.

이 책자는 우리 이웃들이 유학이나 해외지사 근무 등으로 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 각 나라의 알찬 소비문화에 대한 글 모음이다. 절약하는 소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특히 선진국들의 절약 문화를 소개했다. 책 제목인 '생선 반마리만 주세요.'는 일본에서 주부들이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선을 딱 먹을 만큼의 양인 반마리만 사는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때까지 생선은 항상 한 마리 단위로 소비하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단위로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거래를 하는 일본의 문화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전반적인 내용이 선진국의 흥미로운 경제 및 소비문화를 소개하다보니 인기가 매우 좋았고, 1992년에 발간된 글모음 형태의 교육 자료가 1997년에는 만화 형태로 재구성되어 발간되기도 했다. 만화는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이원복 화가가 맡았고, 초판을 발행하여 배포된 후 학교 등에서 경제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하는 등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2판을 인쇄하여 배포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3판까지 인쇄하여 총 10만부에 가까운 만화가 학교 및 공공 기관에 배포되어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공공기관이 제작한 자료가 자발적 수요에 의해 3판까지 인쇄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였다. 이는 교육 자료를 만들 경우 흥미를 가질 만한 전달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내용을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여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4 | 생선 반마리만 주세요.



1992년 자료



1997년 재구성된 만화자료

8. 경제정책 정보 월간지 발간

정부는 경제정책의 의도와 핵심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월간지를 창간했다. 바로 1990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는 월간 ‘나라경제’이다. 나라경제는 현재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5년 동안 발간되어 오고 있다. 발간 취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정책을 직접 해설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비판과 오해에 즉시 대응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며, 경제부처 간 시각차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¹²⁾ ‘나라경제’의 창간은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국에서 기획했고, 편집은 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서 맡았다. 발간은 두 기관에서 주관했지만 12개 경제부처 과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라경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편집회의를 통해 다루어야 할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여 정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창간호의 특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었고,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 전문가 좌담과 함께, 각 부처의 현안 경제정책을 담당 과장들이 직접 설명한 ‘경제정책 해설’이 실렸다. 발간 초반 ‘나라경제’는 ‘우리 농어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등 주요 경제현안들을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현안을 알리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나라경제’에 정책해설을 직접 썼던 부처의 과장들 중 상당수는 이후 각 경제부처의 장·차관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책을 맡았다.

초반에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창간된 ‘나라경제’는 점차 부처 간 소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림 5-5 | 나라경제 잡지 표지



12) 김인철, '나라경제 창간호에서 200호까지', 『나라경제 2007. 7』, KDI 경제정보센터, 2007.

제4절 1990년대 이후 경제교육

1. 사회 경제교육의 의미

학교 밖 경제교육은 1990년대 초반 '사회경제교육'이라 하였다. 사회교육은 학교 밖에서 전개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다. 사회경제교육은 경제를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교육협회(CEE: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에 따르면, 사회경제교육은 “경제 현상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경제 체제의 기능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및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인들에게 실시하는 일종의 사회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본 경제 개념의 이해와 경제적 사고력과 관련된 기능 습득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경제교육은 '사회인'들이 기본적인 경제개념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각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경제문제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인은 학교 밖 일반시민을 일컫는다. 공무원, 국영기업 종사자 등도 포함한다. 또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는 정부와 일반 시민 사이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러 경제주체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이해까지도 포함한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경제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념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¹³⁾

따라서 학교 밖 경제교육, 즉, 사회경제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등의 연수는 제외된다. 물론 공무원들의 경제교육은 우리가 의미하는 사회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다.¹⁴⁾ 결국 학교 밖 경제교육의 흐름을 살펴본다는 것은 일반시민에 대한 경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경제교육이 갖는 특성은 자발적 수요, 실용적 지식, 교육적 기준의 다양성, 교육 내용의 비체계성을 들 수 있다. 사회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학의 평생교육원, 백화점 내의 문화센터, 기타 경제교육기관 등의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원 또는 문화센터 등이 제공하는 사회 경제교육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여기에서는 전문 경제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경제교육을 주로 다루었다.

13) 조영달, 김경근, 「한국 사회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14) 이에 반해 교육과정평가원(2015)이 제시한 경제교육의 목표는 '현실 경제의 다양한 현상과 경제 사회의 변동을 파악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천적 탐구 방법을 익히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적 자세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시대별 사회 경제교육

가. 1990년대

1980년대의 경제교육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1991년에 연구기관과 학계 및 민간의 경제교육기관이 주축이 된 ‘한국경제교육협의회’가 창립되고, 1994년에는 경제교육 흐름 가운데 의미를 가진 것은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창립되었다. 학회의 창립은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회 경제교육의 새로운 흐름은 우리나라가 겪은 1997년의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협의체와 같은 참여적 형태를 띠었다. 이후에는 민간이 직접 주도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간다. 외환위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교육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낳게 하였다. 그렇지만 사회 경제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다만 당위성 차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의 사회 경제교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공무원 경제연수나 시민단체의 간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KDI가 가진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 시기는 학교 안 경제교육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경제교육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 단체를 통한 교과서의 분석이 큰 조명을 받았다. 경제단체들은 학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경제교과서가 갖는 시장경제에 대한 악의적 해석, 반시장적 반기업적 교과서 기술 등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나. 2000년대

이러한 흐름은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를 맞아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신용불량 사태의 초래, 무분별한 소비행태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렇지만 금융기관들의 경제교육은 주로 고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소개와 투자 방법 등과 같은 재테크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부 관련 금융기관 중 일부는 학교 안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교사나 학생 대상의 경제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은 교사 연수나 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들이고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 불량자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차

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 새로운 금융상품의 홍수 등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4년 한국금융교육학회의 창립을 통해 실현되었다.

2000년대 경제교육의 또 다른 흐름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양극화로 경제적 약자가 많아졌으며, 여기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와 국내인과 결혼을 한 다문화 가족 등이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들에게 적절한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새롭게 생겼고, 이들을 대상 계층으로 하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학교 밖 경제교육의 흐름은 과거와 같이 경제교육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물론 학교 안 경제교육과 보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없다.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 경제교육은 학교 경제교육과 서로 조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향후 사회 경제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용 측면에서의 보완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 경제교육은 교육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계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경제교육 수요도 천차만별이다. 앞으로의 사회 경제교육은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경제교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여 갈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이는 경제교육을 공급하는 교육기관들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교육의 공급으로서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경제교육은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마다 처한 환경,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 등이 모두 다르므로 한번의 집체교육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하는데 이를 담당할 경제교육기관으로서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대한민국의 발달된 IT 환경을 활용하여,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접속하여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경제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경제교육의 충실화이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정에 경제교육이 시행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요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경제교육과 사회 경제교육은 그 보완적 방향과 역할에서 그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4. 사회 경제교육의 향후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경제교육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회 경제교육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경제교육은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겨 갔지만 아직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 경제교육은 정부 정책의 홍보나 단순한 경제지식의 함양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카드 사태 등은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과 경제 마인드의 함양이라는 분위기를 제고시켰다.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교육 기관들이 민간의 경제교육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체계적이고 학교 경제 교육에 머물고 있다.

둘째, 사회 경제교육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다양해졌지만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여전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교육 기관이 다양해졌지만 비체계적이고,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교육 부문의 공급 체계가 과거에 비해 그 능력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경제교육의 새로운 경제교육 수요 계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이 크게 늘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존재, 경제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가족, 경제의 고도화에 의한 저소득 계층,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 취약 계층 등은 이러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수요 계층이 확대된 만큼 사회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사회 경제교육 대상들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 또는 당장 필요한 경제적 해결 능력 등과 같은 맞춤형 경제교육에 눈을 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경험한 사회 경제교육은 그들 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오버랩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의 흐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경제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요구 수준도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학교 경제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 경제교육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그 저변이 넓기 때문에 사회 경제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변함없다.

경제교육에 대한 평가

- 제1절 경제교육의 정책효과 평가
- 제2절 경제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평가
- 제3절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 평가
- 제4절 언론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 경제교육
- 제5절 정책 보완점

경제교육에 대한 평가

제1절 경제교육의 정책효과 평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후 추진된 경제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국민들의 경제의식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981년 12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작성한 '경제교육종합계획'의 교육·홍보 과제를 보면 '1. 국민적 과제, 가. 고인플레이 기대심리의 단절;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짐으로써 우리도 일본·독일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각오; 기업, 근로자, 농민, 가계, 정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된 대국민 경제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경제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물가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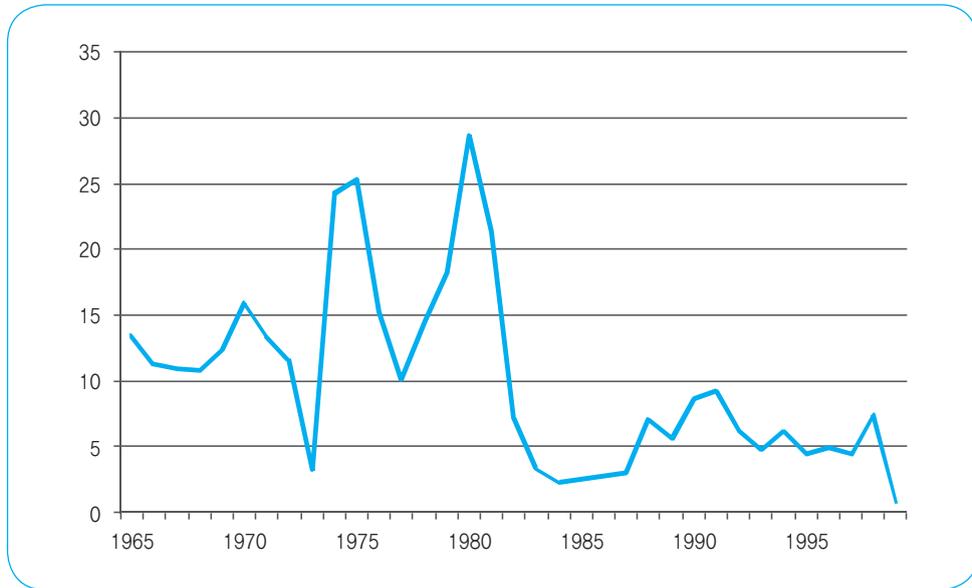
1965년부터 1981년까지 물가상승률은 계속 두 자리 수를 유지했으며(1973년은 3.2%로 예외), 심지어 1978년 1월은 한 달 사이에 소비자물가가 2.9%나 폭등해 이를 걱정하는 사실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끝없이 치솟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1982년 한 자리 수(7.2%)로 내려왔고, 이후 1995년까지 평균 상승률은 5.3%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1979년 20%에 달하던 도매물가상승률도 제5공화국 기간인 1983년~1987년 동안 평균 2.7%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책이 그 효과를 거둔 것이지만 전 방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물가오름세 심리를 제거하고 경제안정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킨 덕에 큰 무리 없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교육은 공격적인 임금 조절, 재정긴축, 정부의 추곡 수매가 억제 등 정치적 자살행위라고까지 여겨지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비슷한 국제경제 여건 아래서 우리경제가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된 것은 단순히 국제경제여건이 호전된 덕만은 아니었으며,

안정화 시책과 동시에 추진된 경제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¹⁵⁾ 수년간 실시한 경제안정화시책 추진에 더해 경제교육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추곡수매가 억제, 예산 동결, 강력한 임금 억제책 등 지금 같아서는 엄두도 못 낼 시책들이 제5공화국 출범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밑바탕은 역시 경제 교육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¹⁶⁾

그림 6-1 | 소비자물가 등락률(1960~1999)



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는 시장경제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만연해진 ‘과소비 풍조’를 바로잡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제교육은 1980년대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후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대국민 경제교육을 추진했으며 공무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 토론회, 맞춤형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시기에 실시된 다양한 경제교육은 민주화와 함께 국민들의 시장경제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조동철·강영옥,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정책』, KDI School, 2013, p.36.

16) 김흥기,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89, p.314.

또한 1990년대의 경제교육은 국민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안목을 갖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사·공무원·언론인 등 지도층 뿐 아니라, 군인·학생·주부 등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교육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경제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경제문제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이후 경제교육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민간 경제교육 기관의 발달로 이어졌다.

1994년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국민들의 경제의식과 관행에 관한 조사¹⁷⁾를 수행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의식개혁에 대해 국민의 75.3%가 공감을 표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91%의 국민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도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DI 경제정보센터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해 나타난 우리 경제의식의 변화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 'IMF 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69.3%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년 전 동일문항 조사 결과(50.8%)에 비해서도 18.4%p 늘어난 결과라고 하였다.¹⁸⁾

이 보고서들은 1980년대부터 추진한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교육이 국민들의 경제 이해와 경제 의식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경제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평가

2000년대 이전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모두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집체교육이 중심이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IT 환경이 발전되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부는 국한되었고,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교육 방법도 교재나 인쇄물에 의존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제작된 교재에는 경제와 정책 관련 전문용어가 가득 채워졌고, 그래프와 도표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제공되었다. 반면 주부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용어를 줄이고 그림이나 만화 등을 삽입함으로써 교육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경제교육은 왜 하는가'에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추진성과 부문에서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7) 박영호, 「국민경제의식과 관행에 관한 조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p.7.

18) 송대희 외, 「IMF 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KDI 경제정보센터, 2001, p.57.

“방법 면에서 보면 획일적·경직적인 경제교육의 실시로 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민방위 교육 시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제학 박사에게까지 민방위 강사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거나 군부대 교육 시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외우지 못하면 외출, 휴가를 금지시키는 경우, 또 교직원 부인에 대한 교육 시 그러지 않아도 박봉에 알뜰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국산품 애용이나 절약 저축만을 강조하는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장소의 시설이나 강사의 수준이 미흡하여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¹⁹⁾

그러나 당시 경제교육 담당자들이 총리실에 올린 보고서에는 제한된 환경에서 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남아 있다. 경제교육 계획에 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지시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²⁰⁾

- 임금, 물가, 국제경쟁력, 불황, 도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강의하도록 할 것(예-미국 자동차 회사 도산을 포함(한국의 예도 포함))
- 현재 작성된 슬라이드는 제목은 너무 크고 내용이 적으니 - 제목이 적고 내용이 뚜렷하도록(색감 이용 등) 할 것.
 - 도산된 서독 회사의 이름을 공장 그림 위에 적을 것
- 국내 저축이 물가안정,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리도록 할 것
가계예금 도입으로 가계저축 관습 정착되어 지난 추석 시 가정 강도 건수가 줄어들었음.
- 설명은 청중 위주로 할 것
예: 보호무역이라는 강사의 평범한 용어도 청중에게는 어려움
유치한 것으로 느끼는 것도 실은 효과적임
- 공정거래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도록 할 것(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뛰어 들 것)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경제교육이 이론 교육과 단기적인 정책 홍보에 치우쳐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의 경제의식이 비교적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 이론부터 교육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경제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부터 하는 것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1992년 국민경제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생선 반마리만 주세요 - 외국사람들의 소비생활 이야기’는 실생활에 접근한 경제교육 교재라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 교재의 수요가 폭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런 형태의 자료가 많이 발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교육은 왜 하는가』, 1985.

20) 국무조정실, 『경제교육 강사단의 청와대 보고 결과』, 1982.

한편 교육내용이 현실은 반영하되 정확한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경제학 이론에 나오지 않는 ‘과소비’등의 용어를 쓰는 등 대중적 처방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경제의식의 함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교육에 정책현안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은 것은 즉각적인 정책 이해를 돕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변경 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정책 내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때 장기적인 정책방향도 교육내용에 함께 포함되어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980년대의 경제교육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민간부문이 일부 참여를 했고, 1990년대 경제교육은 민간부문이 대거 참여를 하여 한국의 경제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는 있었지만 민관이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한 것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참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해당 기관의 목적을 위해 단편성 혹은 홍보성의 경제교육이 많아 경제교육의 보편화 및 체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제3절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 평가

1983년 3월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대전·광주 등 3대 도시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는 정부가 실시한 경제교육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경제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경제를 모르고선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장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²¹⁾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은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을 알리려는 것’(26.9%)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중 89.2%가 국민경제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당시 국민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홍보도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은 후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38.4%)’, ‘약간 도움이 되었다(45.5%)’, 등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83.9%나 되었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3.5%나 되어 당시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를 정부가 충족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전국 6대 도시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²²⁾ 결과를 보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홍보는 ‘교육계몽을 위한 홍보’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국민들 스스로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기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매일경제신문, 1983.3.24.

22) 한정호,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 p.28.

이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경제 분야 중 정부의 홍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물가정책'을 꼽았다. 이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물가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제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학력자일수록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호감 가는 홍보 방법으로는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이라고 조사되었다.

조사는 경제 관련 홍보물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전체 응답자의 60%가 홍보물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992년의 조사(5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와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경제문제에 민감한 40~50대에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 경제 홍보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실시된 정부 경제교육의 성공 요인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교육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대규모 집체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던 경제교육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활용한 방법과 만화·영상물·리플릿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언론을 통해 추진된 정부의 경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공무원들이 신문에 직접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50%,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는 70%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정책 담당자의 설명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 의식수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신뢰하는 매체와 방법으로 경제교육 실시 방법을 꾸준히 개선한 것 또한 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인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절 언론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 경제교육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 당시 신문 기사에 관련 키워드가 얼마나 언급되었는가를 통해 당시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당시 언론이 경제교육과 문제로 제기된 경제현안에 대해 어떠한 관심과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1970~90년대 신문 기사에 실렸던 대국민 경제교육 관련 키워드('경제교육', '물가상승', '임금인상', '추곡수매가')를 검색하여 각 키워드의 출현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신문 기사에서 각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집계하여 당시 그 주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유추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제교육'과 다른 관련 키워드 간의 출현 빈도수 추이를 비교하였다. 다만, 당시 경제교육이 물가나 임금 안정 등의 정책 목표와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살핀 것은 아니며 언론의 관심도만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개요〉

- 조사방법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ary.naver.com>)를 통해 경제교육 관련 키워드 검색, 연도별 출현 빈도수 측정
- 검색어: '경제교육', '물가상승', '임금인상', '추곡수매가'
- 검색기간: 1971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분석대상 언론사(3개사):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²³⁾

2. 분석의 결과

1971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신문에 실렸던 대국민 경제교육 및 안정화시책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 | 경제교육 관련 키워드 신문 출현 빈도

(단위: 건)

| | 검색어 | | | |
|-------|------|------|------|-------|
| | 경제교육 | 물가상승 | 임금인상 | 추곡수매가 |
| 1971년 | 3 | 426 | 215 | 66 |
| 1972년 | 5 | 310 | 145 | 46 |
| 1973년 | 1 | 310 | 173 | 41 |
| 1974년 | 1 | 555 | 295 | 93 |
| 1975년 | 5 | 424 | 191 | 117 |
| 1976년 | 5 | 341 | 157 | 104 |
| 1977년 | 8 | 358 | 167 | 65 |
| 1978년 | 3 | 410 | 265 | 50 |
| 1979년 | 2 | 462 | 221 | 60 |
| 1980년 | 7 | 432 | 432 | 31 |
| 1981년 | 48 | 510 | 303 | 171 |
| 1982년 | 75 | 339 | 275 | 128 |
| 1983년 | 155 | 237 | 209 | 93 |
| 1984년 | 70 | 150 | 162 | 59 |
| 1985년 | 43 | 201 | 239 | 65 |

23)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1971.1.1~1999.12.3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3개 언론사에 대한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였기 때문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Kinds) 서비스에서는 1989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키워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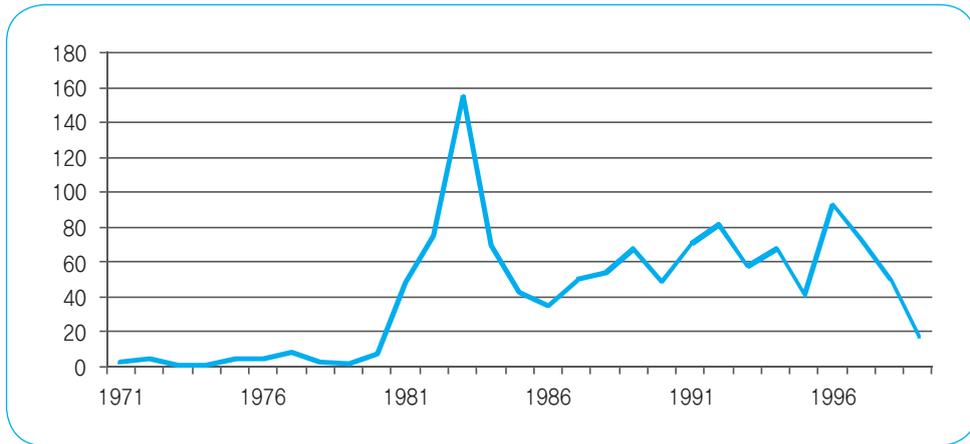
| | 검색어 | | | |
|-------|------|------|------|-------|
| | 경제교육 | 물가상승 | 임금인상 | 추곡수매가 |
| 1986년 | 35 | 137 | 225 | 21 |
| 1987년 | 50 | 240 | 1095 | 115 |
| 1988년 | 54 | 397 | 1133 | 198 |
| 1989년 | 68 | 492 | 1694 | 360 |
| 1990년 | 49 | 573 | 768 | 197 |
| 1991년 | 71 | 621 | 696 | 148 |
| 1992년 | 82 | 348 | 504 | 140 |
| 1993년 | 58 | 376 | 522 | 151 |
| 1994년 | 68 | 504 | 374 | 68 |
| 1995년 | 41 | 263 | 360 | 33 |
| 1996년 | 93 | 349 | 304 | 123 |
| 1997년 | 73 | 334 | 333 | 30 |
| 1998년 | 50 | 239 | 100 | 12 |
| 1999년 | 18 | 357 | 151 | 18 |

가. 경제교육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로, 경제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던 시기는 1980년대 초중반이다. 당시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결과도 이와 일치함을 보인다.

대국민 경제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1980년 이전까지는 ‘경제교육’에 대한 검색결과가 매년 10건 이내에 불과하다. 그래프를 보면 1981년에는 48건으로 그 출현 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1983년에는 155건으로 최고에 달했다. ‘경제교육’ 키워드 검색 결과를 통해 당시 경제교육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198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어느 정도 부침을 겪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2 | “경제교육” 키워드 검색 결과



당시 경제교육 관련 주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1981.4.15) “물가안정이 경제 생사 좌우

(...) 순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국민과 근로자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국민경제교육을 반복해서 추진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보활동도 적극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1983.2.4) “순대통령 안정기조 정착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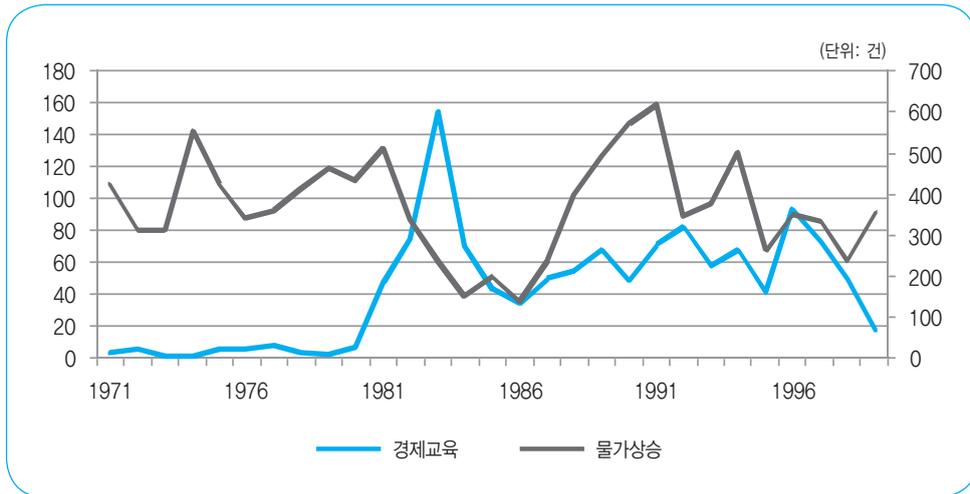
순대통령은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므로 올해는 경제교육의 범위를 크게 넓혀 전 국민이 경제인이 되어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경제교육과 관련 키워드 간 출현 빈도 비교

대국민 경제교육의 발단이 된 1970년대 후반의 경제안정화시책과 관련하여 3개의 키워드(‘물가상승’, ‘임금인상’, ‘추곡수매가’)를 선정하고, 이를 ‘경제교육’에 대한 키워드 검색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우선 ‘경제교육’과 ‘물가상승’의 출현 빈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1980년대 초중반 시기에 ‘경제교육’의 출현 빈도수는 증가하는 반면 ‘물가상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83년 ‘경제교육’은 출현 빈도수가 15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84년 ‘물가상승’은 10여 년간 최저 수치인 150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6-3 | 경제교육(좌) 및 물가상승(우)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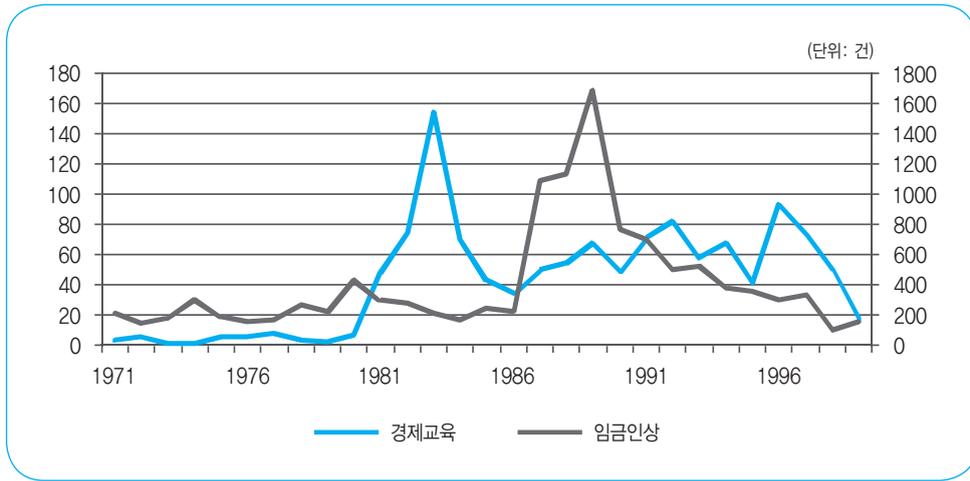
〈그림 6-3〉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초중반의 경제교육과 물가상승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1981년 이후 물가가 급격히 안정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다만 1986년까지 안정되던 물가가 1987년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의 우려에 대한 언론의 주의환기가 급증하면서 물가상승 키워드가 늘어나고, 더불어 경제교육의 키워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1984.1.5) “새해 우리경제의 좌표(2) 물가[上]”

(...) 1983년은 우리나라 물가관리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해라고 할 수 있다. 도매 물가는 전년 말에 비하여 0.8%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 상승에 그침으로써 건국 이래 가장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루었다. 특히 83년도에 이룩한 물가안정이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 등 모든 국민의 합심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데 더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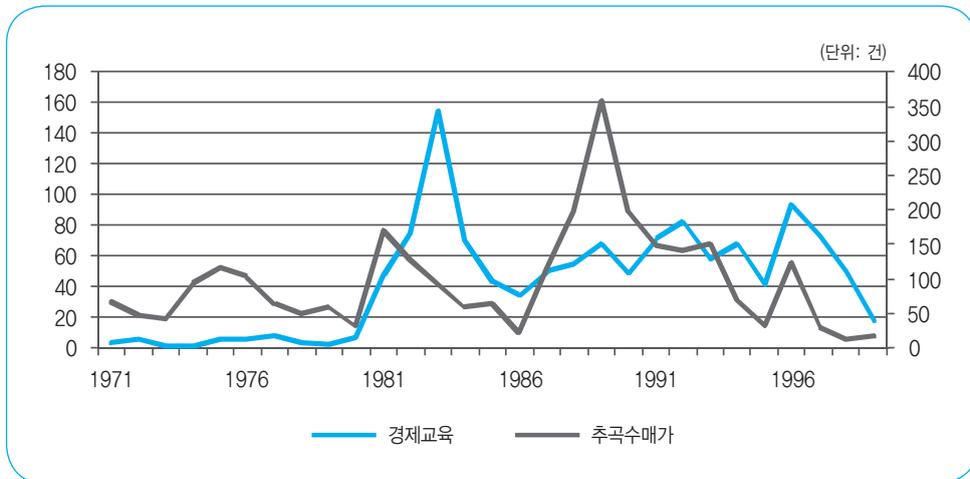
‘경제교육’과 ‘임금인상’ 키워드는 뚜렷하게 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늘어나던 임금인상 키워드의 출현 빈도는 경제교육 키워드가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려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때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크게 안정되는 시기였다. 임금인상 키워드의 빈도는 1980대 후반에 급증했는데, 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억눌려있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경제교육 키워드의 빈도도 증가했고, 이후 임금인상 키워드 빈도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4 | 경제교육(좌) 및 임금인상(우) 검색 결과



‘경제교육’과 ‘추곡수매가’의 출현 빈도는 대국민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출현빈도가 줄어드는 시기에 강력한 추곡수매가 안정책이 이루어져 추곡수매가의 인상이 크게 억제되었다.

그림 6-5 | 경제교육(좌) 및 추곡수매가(우) 검색 결과



제5절 정책 보완점

대국민 경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와 함께 대상에 맞는 적절한 경제교육 자료가 제작·보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980년대 초에 시작된 정부의 경제교육 방법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일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안정화정책을 긴급히 추진해야 했던 당시 절박했던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국, 그리고 대규모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던 경제교육은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1983년 7월 5일 총무처에서 중앙행정기관(현재의 지방자치단체)과 헌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낸 공문 「'83 하계 공직자 경제교육 실시 통보」에 의하면 1983년 7~8월 2개월간 공무원 65만 명, 산하 단체 21만 명, 총 86만 명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방향 설명(25분, 강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25분, 슬라이드)', '물가안정시대를 연다(25분, 슬라이드)',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25분, 슬라이드)', '평가(10분)'의 총 120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교사,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전문가가 강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담당자들은 교육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그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된 1980년대 경제교육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 경제안정화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가 빠르게 안정화의 궤도에 오르는 데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0년대의 경제교육은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들의 자율성과 개방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방적이 아닌 소통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경제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경제 자료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 실제로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에 따르면 '경제정책 홍보물이 더 쉬워져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정부의 경제교육도 대상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료의 개발, 형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어 이후의 경제교육은 점차 수준별, 수요별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법 측면에서도 강의형, 세미나형, 현장교육형, 체험형 등 다양한 교육 형태와 새로운 교육 이론을 도입한 방법들이 적용되어 교육 만족도와 효과가 크게 개선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들의 등장에 따라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하는 일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의 경제교육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경제교육이 가장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면에서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은 점차 대한민국의 경제력 강화와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그 내용이 확대·발전되었다. 초기의 경제교육은 경제안정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에 집중되었는데, 안정화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교육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경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교육의 내용도 경제이론뿐 아니라 금융교육, 신용교육, 생애관리, 직업교육 등 수요에 맞게 세분화·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제 지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함은 물론, 국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경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제교육을 정부가 직접 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사회적인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점차 그 역할은 전문기관에서 맡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경제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에서 특성을 살린 분야의 경제교육이 다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경제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공청회·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내용에 따른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제7장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1절 개도국에 대한 전파 가능성

제2절 개도국에 대한 정책 제언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1절 개도국에 대한 전파 가능성

본 보고서에서는 1980~1990년대 한국에서 추진된 대국민 경제교육의 배경과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체계,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세부 추진 내용,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30~40여 년 전에 추진된 일이지만 한국에서의 경제교육은 한국 경제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경제교육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은 아니었지만,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로에서 정책 변화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경제교육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사실 어느 국가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더불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자국을 둘러싼 내외 경제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의 적응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변화도 정부의 정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의식주 해결에 매진하지만 이후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에도 관심이 높아진다. 이처럼 경제발전 단계와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경제발전 초기에 경제규모가 작고 축적된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지 않으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은 불균형 성장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국가들에서의 경험이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의 발전 주체가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의 국민들은 기존 발전전략에 익숙해 있어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해당 국민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정부에 의존한다. 보호무역이나 특혜금융 등 정부 보호 아래 있었던 기업들은 홀로서기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것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줄 능력을 갖지 못한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해 시장경제로 돌아선 것도 정부 주도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작동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과거처럼 많은 국가들의 정부가 특혜금융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국제규범상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중요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치면 문제의 실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는 반드시 국민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 수단이 바로 한국이 성공적인 경험을 한 바 있는 경제교육이다. 그래서 대국민 경제교육은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결정권자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또한 국민들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더불어 세계경제의 흐름을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경제교육의 대상도 공무원과 기업인 등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도 추진 전략상의 성공요인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경제교육의 추진 경험은 개도국들마다 다양한 경제적 여건과 민주화 수준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변화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한다면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한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포함해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교육의 유용성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들도 대국민 경제교육의 시기를 앞당기고 강화하면 자국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개도국에 대한 정책 제언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로 인해 파생된 많은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여 년간 지속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많은 반발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안정위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 경제교육은 비단 정책변화를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한국은 대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정부에 전담조직이 있음은 물론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한국 정부가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대국민 경제교육을 추진하려면 우선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30여년 전에

한국정부가 시행했던 경제교육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각국마다 민주화 정도가 다르고 국민들도 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경제 관련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 다양성과 차이만큼 다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개도국들이 자국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도국 젊은이들의 소비패턴이나 추구하는 삶의 가치 등 사고방식은 선진국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느 국가나 경제발전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단계별 정책변화는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수반하고, 이로 인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가 발전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교육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기 다른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할 때 교육적 효과가 높다. 경제교육 내용은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경제교육 수단은 국민적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와 같은 소통 수단을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경제교육 강사는 교육 내용과 대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양성 및 확보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높이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선호가 있거나 신뢰가 높은 강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섯째, 세계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는 외국의 저명한 학자나 국제기구의 장을 인터뷰하는 것이 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교육을 단순히 경제이론이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면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경제교육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제교육의 추진체계는 정부 및 전문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교육의 지속을 위해 정부 내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물론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교육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정책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고위 정책당국의 추진 의지가 한국에서 경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처럼, 해당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경제교육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교육의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 변화는 인식이 먼저 변해야 가능하므로, 경제교육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밖에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자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화를 주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세계 경제교육 흐름은 선진국일수록 강화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개도국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생선 반 마리만 주세요.』,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12.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생선 반 마리만 주세요.』(만화),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2.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 및 과제』,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2.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한국 사회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10.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 국사편찬위원회, 2008.12.
-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정책』, 기획재정부, 2013.
- 김흥기, 『祕史경제기획원 33년 - 영웅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교육은 왜 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 1984.6.
- 송대희, 「IMF 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KDI 경제정보센터, 2001.3.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아안 미러클1』, 나남, 2013.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아안 미러클2-도전과 비상』, 나남, 2014.
- 윤홍근,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1호, pp.163~187, 2013.2.
- 이상식·박홍수, 『정부 정책홍보에 있어서 민간홍보전략의 활용』,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12.
- 이재웅, 「학교 경제교육과 국민 경제교육」, 교육개발 제11권 제6호(통권63호), pp.64~68, 1989.1.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와 국민생활』, 한국개발연구원, 1982.11.
- 한정호, 『경제정책 홍보물의 내용분석 및 개선 방향』,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12.
- 한정호,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12.
- Justin Yifu Lin,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ought, Strategy, and Viability』, Cambridge, pp.81~91, 2009.
- 건설부 국토계획국, 「1989년 4/4분기 경제교육지침 및 교재배포」, 『일반문서철(국계심)』, 건설부, pp.12~21, 1989.
- 경제기획원, 「Ⅲ. 국민정신교육, 경제교육실적 및 실시계획」, 『1984년 주요업무계획』, 경제기획원, pp.62~63, 1984.
- 경제기획원, 「Ⅴ. 내실있는 경제교육과 홍보」, 『1984년 주요업무계획』, 경제기획원, pp.48~50, 1984.

- 경제기획원, '6. 경제교육 및 홍보의 심화·확대', 『1985년 주요업무계획』, 경제기획원, pp.41~44, 1985.
- 경제기획원, '6. 경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통계의 발전', 『1988년 주요업무계획』, 경제기획원, p.16, 1988.
- 경제기획원, '8. 경제교육홍보의 강화로 국민의 동참의식 향상', 『1983년 주요업무계획』, 경제기획원, p.31, 1983.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경제교육종합계획』, 『국민정신교육(규정 및 안건)』, 국무조정실, pp.78~94, 1981.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공직자경제교육』, 『직장교육 1982(2-1)』, 국무조정실, pp.56~81, 1982.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경제교육계획보고』, 『직장교육 1982(2-1)』, 국무조정실, pp.82~85, 1982.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보고서(경제교육 강사단의 청와대 보고 결관)』, 『직장교육 1982(2-1)』, 국무조정실, pp.33~55, 1982.
- 법무부, '4. 의식구조의 선진화-(1)경제교육 및 국민정신교육', 『1983년 주요업무계획』, 법무부, p.50, 1983.
- 총무처, 『우리경제의 오늘과 내일: 공직자 경제교육 교재』, 총무처, 성진문화사, 1981.
- 총무처 인사국 교육훈련과, 『1983하계 공직자 경제교육 실시 통보』, 『교육훈련지침계획 능력발전 20년』, 총무처, pp.244~452, 1983.
- 경향신문, 「25일부터 하루 6시간 3단계로 나눠 공무원 특별경제교육 실시」, 1981.11.20.
- 경향신문, 「4월부터 방과 후에 각 급 학교서도 경제교육 실시」, 1983.3.7.
- 경향신문, 「공무원 의지개혁 집체교육」, 1982.4.30.
- 경향신문, 「공무원에 경제교육 오늘부터 86만 명에」, 1982.12.22.
- 경향신문, 「공직자 86만 명에 경제교육」, 1983.2.5.
- 경향신문, 「공직자 경제교육 산하 단체 포함, 86만 명 대상」, 1981.11.26.
- 경향신문, 「국민 경제교육 강화」, 1986.3.17.
- 경향신문, 「난국을 헤치고 ... 5년 (4) 깨뜨린 [성장당의]」, 1985.12.9.
- 경향신문, 「대외정책연 경제교육연 신설에 무용론 강력대두」, 1989.7.27.
- 경향신문, 「대학교수 등 초청키로」, 1981.11.24.

- 경향신문, 「민간 경제 단체 홍보업무 강화」, 1988.5.30.
- 경향신문, 「새드라마 객주 방영 K2-TV 38일부터」, 1983.3.21.
- 경향신문, 「이해 없이 경제난 극복 못하고 고통 분담 없이 물가 못 잡는다.(국민경제교육의 필요성)」, 1981.10.26.
- 동아일보, 「흑자정착 균형발전 추진」, 1987.1.13.
- 매일경제, 「경제교육 필요하다 93.5%」, 1983.3.24.
- 매일경제, 「‘경제교육진흥법’ 제정 필요하다」, 1992.11.9.
- 매일경제, 「경제교육연구원 설립」, 1989.7.4.
- 매일경제, 「경제대토론회에 거는 기대」, 1985.8.31.
- 매일경제, 「공무원에 경제교육」, 1981.11.20.
- 매일경제, 「국민경제 교육 평가회의 열려」, 1983.11.11.
- 매일경제, 「농민과 경제교육」, 1985.8.3.
- 매일경제, 「대국민 경제교육 강화」, 1988.4.26.
- 매일경제, 「도·농 소득격차해소 깊은 관심」, 1987.3.2.
- 매일경제, 「물가안정 등 자발 참여 유도」, 1983.6.8.
- 매일경제, 「물가안정이 경제의 사활좌우」, 1981.4.16.
- 매일경제, 「민간경제교육센터 설립 추진」, 1987.10.13.
- 매일경제, 「민간경제교육협 발족 경제교육 창구 일원화」, 1984.8.8.
- 매일경제, 「‘백년경제’ 주춧돌부터 새로 다져야」, 1989.3.24.
- 매일경제, 「설문조사 결과: 서울, 대전, 광주 시민 1천 명 면접 조사 분석 ‘경제 지식 습득하고 싶다’ 83.8%」, 1983.3.24.
- 매일경제, 「외채해소문제 가장시급 2천9년까지 선지대열」, 1983.12.12.
- 매일경제, 「정치, 경제 시책 물가는 가장 무서운 적」, 1982.1.22.
- 매일경제, 「주요부처 업무계획 경제기획원」, 1987.1.13.
- 매일경제, 「참여 협동하는 경제교육」, 1981.4.18.
- 매일경제, 「통화관리 운신폭」, 1989.2.27.
- 매일경제, 「한국경제와 안정화정책」, 1981.9.9.

1. 경제교육정책 연표

| 연도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
| 시대 상황 | 4.19 혁명 | 5.16 군사정변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증권거래법 제정 제2차 통화 개혁 | 공영제 증권거래소 출범 | 수출지향 전략 수립, 수출 1억 달러 돌파 | 금리현실화 조치 |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 수출 3억 달러 돌파 | 경부 고속도로 건설 (1966~1970) | 수출진흥 제도 시행 |
| 관련 조직 | | 경제기획원 출범* ²⁴⁾ | | | | | 국세청 신설 | | | |
| 활동 내용 | | | | | | | | | | |
| 연도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 시대 상황 | 미국의 SSA 원조 중지 |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 8.3 '사제동결' 시행 |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 10월 제1차 석유파동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 '중동진출 추진방안' 수립 | '부가치세' 도입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1981)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인당 GNP 1,000달러 달성 | 부동산투기억제와 자기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제2차 석유파동 | 4월 17일, 경제안정화 대책 발표 박정희 대통령 서거 |
| 관련 조직 | | KDI 설립 | | | | | | | | |
| 활동 내용 | | | | | | 중동경제 협력관 신설 | | | | 1월, '1980년대를 향한 새 전략' 책자 발간 |

24) *기호는 같은 조직 내의 변화를 나타냄.

| 연도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시대 상황 |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병해로 쌀 대홍작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82~1986) |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법률 제정 시행시기는 대통령에 위임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 수정안) 3단계 수입자유 화방안 발표 | 최저임금제 시안 발표 (1987년부터 단계적 시행) |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1986년 종합토지세로 개편) |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82~1986) 무역수지 흑자 달성 | 노사분규 급증 | 국민연금제도 시행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
| | 11대 진두환 대통령 취임 | 제5공화국 출범 (12대 진두환 대 통령 취임) 경제기획원 '대국민경제흥보 기획단' 구성* | '경제교육기획 관실'로 확대 개편* | | 8월 '민간경제교육 협의회' 설립 | |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전경련 신하 '경제사회 개발원' 설립 한국교육개발원 (KED) 내 경제교육연구실 신설 | | | '경제교육기획국' 으로 확대 개편* 경제교육기획과, 교육홍보과, 교육조사과 설치* |
| 관련 조직 | | | 군인 등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 4월, 초·중·고·대 학생 대상 경제교육 시작 | 경제교육 참여기 관 대폭 확대 (정부 12부처, 경제 4단체, 5개 대중소기업체, 국책은행, 5개 연구기관 등) | 8월 27일, 경제대토론회 개최 | 학교 경제교육 대상 → 교원, 학부모가 지 확대 | | | 국민경제제도 연구원 설립 |
| | 활동 내용 | 경제다큐 TV 프로그램 제작 시작 | 대국민 경제교육 본격 시작 공무원 대상 단체교육 시작 | 경제해설 TV 프로그램, 드라마 등 제작 및 방영 | | | | | | |

| 연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시대 상황 |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92~1996) | 단기 금융 자율화 및 개방계획 발표 중구과 국교 수립 | 신경제 5개년 계획 시행 (1993~1997) |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 | 부동산거래 실명제 발표 자본시장 자유화 방안 발표 | OECD, 한국가입 승인 노동관련 법 개정(복수노조 허용 등) | 외환위기, IMF구제금융 요청 | 외환위기 여파로 -6.8% 성장 | 경제성장률 10.7% 인당 국민소득 8,581 달러, 세계 54위 |
| | 금융실명제 전면 부류 | | | | | | | | | |
| 관련 조직 | | '한국경제교육 협의회' 창립 국민경제제도 연구원 → KDI 국민 경제교육연구소 로 재편 | | | 경제교육기획국 폐지 과 단위로 축소 한국경제교육 학회 창립 | | | | 경제교육추진 단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
| | |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 | |
| 활동 내용 | 월간 '나라경제' 창간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교사, 공무원 경제교육 | 지방순회 정책 토론회 | 지방순회정책 토론회 | | 금모으기 운동 전개 | |

|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시대 상황 | 1월 무역수지: 수출 122억 3,000만 달러, 수입 126억 3,000만 달러 | 한국, IMF 관리체제 종료 | | 수출 1,949억 달러 ·159억 달러 흑자 | 경제성장률 5.6% 인당 소득 1만 4,162 달러 5월 무역수지 흑자 30억 달러 기록 | |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 4월 경상수지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9억 3,000만 달러 적자 기록 | 월, 34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 경제교육지침법 제정 |
| 관련 조직 | | | | 민간단체 '청소년금융교육 위원회' 발족 | '민간경제교육 실무협의회' 발족 | | '민간경제교육실무협의회' → '경제교육협의회'로 개편 | |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교사, 학생 등) | 5월, 한국경제교육 협회: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 |
| 활동 내용 | | | | | | | | | | |

www.ksp.go.kr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Tel. 044-215-2114 www.mosf.go.kr

KDI국제정책대학원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1114 www.kdischool.ac.kr



9 791155 451670
ISBN 979-11-5545-167-0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Tel. 044-550-1172
- www.kdischool.ac.kr